

누구의 말일까요?

“아직도 5·18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의 헛소리

“저는 청렴하게 살아 왔습니다. ... [부동산 투자는] 딱 두 개 성공했습니다.”
위장전입만 17번 하고, 부동산 투기로 수십 배 차익을 냈다는 국방부 장관 후보 김병관

“사회생활을 하면서 품위유지비 등에도 사용했다. 늘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생활비로 연 7억 5천만 원 사용한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손자병법 3백 번 보면서 재테크 전술을 연구한 것이냐.”
김병관을 비교는 민주통합당 안규백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었다면 [재산이] 2백20억~2백30억 원은 돼야 한다.”
‘무소속’ 친박 의원 김형태의 껀변

토크쇼 사회자: “북한에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나라에 대체 왜 간 겁니까?”
데니스 로드맨: “미국에는 2백만 명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됩니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종신부 면접에서 국방부 관계자

“박원순·이정희·낸시 랭·공지영은 종북주의자다.”
국정원의 안보 강연에서

“나는 가장 광의로 종북을 규정할 때는 ‘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종북으로 부른다. 그 기준이면 낸시 랭도 들어간다.”
우파 변희재의 ‘종북’ 감별법

“사회가 배려해 줘야 하는 게 맞죠. 엄마가 전여옥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네티즌, 전여옥 아들이 사회적 배려자 전향으로 입학했다는 소식에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 가판은 4월 1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나편(오아시스빌딩)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정문 건너편 14:45~16:00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격주 화요일 (다음 가판은 4월 2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19:00~20:00
격주 수요일 (다음 가판은 4월 3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3일)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1층 월요일 11:20~12:20 국민대 복지관 1층 학생식당 앞 화요일 12:00~13:0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화요일 11:30~12:30 부산대(부산) 정문 앞 화요일 11:50~12:5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수요일 11:45~12:45 충남대 공대2호관 앞(죽문) 수요일 12:00~13: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건국대입), 불무집(성균관대입),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이윤 체제의 생지옥을 보여 준 여수 폭발 사고

3월 14일 여수산단 대립산업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폭발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주변 유리창이 다 깨지고 작업 도구와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구급차!”를 외치며 발을 동동 구르던 한 노동자는 팔과 다리가 잘린 동료를 들고 1백 미터를 뛰었다.
진정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이런 폭발, 유독 물질 유출 사고가 너무나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1주일 전에도 구미산단에서 폭발 사

고가 발생했다.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여수산단도 ‘화약고’로 악명 높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백여 건에 이르는 각종 사고가 발생했고, 1천여 명 넘게 죽거나 다쳤다.
재벌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은폐와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기 바쁘다. 정부는 이런 재벌들에게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날개를 달아 줬다.
이 속에서 단기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사고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노동자들은 “사축이 하루라도 빨리 보수를 마치고 가동하기 위해 공기 단축에만 열을 올렸다”고 증언한다. 이윤에 눈 먼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하루 14시간씩 일하도록 몰아붙였다.
돈벌이에 미친 이윤 체제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 낸다. 우리의 안전과 목숨을 노리는 이윤 지상주의를 변혁해야 이 비극을 잠재울 수 있다.

박설



이윤 지상주의가 만들어 낸 비극 3월 15일 대립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신포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한국은 결핵 사망률 OECD 1위다. 결핵 후진국인 셈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병원급은 63.3퍼센트, 의원급은 38.5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 성공률은 91.6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진료가 끝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보건교육과 상담을 하고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신종플루가 크게 번진 몇 해 전, 민간의료기관들은 전염성이 강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했다. 초기에는 병에 대한 정보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34곳에서 의무적으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라고 지시했다. 격리병동조차 없던 의료원들은 갑자기 몰리는 신종플루 환자들을 위해 건물 한 층을 모두 비우고 진료를 했다.
전염을 걱정한 일부 다른 환자들이 발길을 돌렸지만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이런 환자 ‘호황’은 신종플루가 ‘돈이 되는 질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끝났다. 민

간병원들이 너도나도 더 좋은 시설과 의료진을 내세우며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바로 다음 날,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이런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날 진주의료원에는 2백여 명이 입원해 있었다.
홍준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댔다. 그러나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단 1곳뿐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 알려져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민간의료기관들은 대놓고 돈벌이를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돈벌이

서민과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견줘 입원비는 평균 67퍼센트, 외래 진료비는 약 79퍼센트만 받는다. 또 지방의료원은 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한다. 게다가 비급여진료를 거의 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결국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다. 그동안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날이 갈수록 줄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지방의료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기도 했다. 수익을 남기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고 지원 실시” 방침을 정했다.
결국 무늬만 공공병원이지 정부가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사실 의료로 수익을 남기겠다는 발상이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우리 동네 구청장이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적자라고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나라의 의료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다.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3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다. OECD 평균이 70퍼센트지만 우리 나라는 7퍼센트도 채 안 된다.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왜곡된 구조 때문에 의료비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의료비 증가 속도는 최근까지 OECD 1위였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명목으로나마 유지되던 공공의료기관을 아예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의 첫 민영화 조처다. 역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의료원을 고사시켰다면, 박근혜 정부는 전면적 의료 민영화를 위해 아예 공공병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
진주의료원이 이대로 폐쇄된다면 나머지 지방의료원들도 문을 닫거나 민간병원처럼 돈벌이 진료를 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싸워야 하는 이유다.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계급 지배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남아공에서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숨진 활동가 69명을 기리는 데서 유래했다. 아직까지도 한국과 각국 정부가 인종차별 정책을 유지·강화하는 진정한 이유를 살펴본다.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

인종차별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도처에서 훨씬 심각해졌다. 단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주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처지인 이주 아동과 난민 신청자들마저 공격받았다. 학교를 다니던 아동이 아무런 죄도 없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추방되고, 출입국은 난민 신청이 불허된 사람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단속한다.
인종차별의 원인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편견이나 타인을 배척하는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자체다.

자본주의는 인종차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조화했다. 노예제를 정당화하려고 고안하고 발전시킨 인종차별은 노예제가 폐지된 오늘날까지도 득세한다.
최근 한국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충격적일 정도로 가혹하고 끔찍하다. 이탈을 막는다는 빌미로 노동 현장에서 감시당하고, 신분증을 빼앗기고, 집이라고 부르기에 는 너무도 열악한 곳에 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대다수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슷하다. 자본가들은 늘 부족한 노동력을 국경 밖에서 끌어들였고, 이때 노동시장을 계층화하고 임금, 노동조건, 법적 지위 등을 차별화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 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국적, 피부색,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차별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완전히 봉쇄한다. 또 대부분의 제3세계 나라 출신자들은 비자 없이 한 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런 규제로 정부는 해당 이민자들이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퍼뜨린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가족동반도 급할 때 ‘국익’ 운운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사업장에 발을 묶어두는 것은 한국인 노동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국익’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 받는 한국인 노동자와 빈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사회 복지 대책 확충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래 정부는 일자리와 치안 등을 명분으로 이주민 권리를 규제하고 박탈해 왔다. 그러나 이주민을 모두 내쫓거나 인력 도입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는다. 좋은 싫든 이들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통제할 뿐이다. 또, 이주민 단속을 사회 통제 강화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1월에 경찰은 전국에서 36곳을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선정해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한 불심검문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고하면서 경찰은 외국인 범죄율이 여전히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치안’과 ‘사회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을 노리는 단속을 늘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정부는 3월 18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광역 단속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여러 출입국관리소가 단속반 규모를 키워 합동 단속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정부의 정책과 제도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요인들이다.
인종차별은 이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위기와 양극화가 첨예해지는 오늘날, 인종차별은 노동자들을 분열과 반목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발전시킬 때, 인종·여성·성소수자 차별 관념들은 약화되고 연대와 자신감이 성장할 수 있다.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②

본격화한 일본의 재무장을 누가 막을 것인가

두 차례 연재를 통해 1) ‘평화’헌법이 형성된 배경과 모순 2)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살펴본다. 이번이 그 둘째다.

“북한이 로켓을 빨리 쏘면 좋겠다.” 지난해 말 일본 관방장관은 무심코 자기 본심을 드러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최근 북한 핵실험을 기회 삼아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최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은 헌법상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며 선제공격론에 해당하는 섬뜩한 말을 했다. 일본 지배자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지배계급은 지난 20년간의 경기 후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군사력 증강 야욕을 키워 왔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을 추월한 중국의 부상은 이를 더한층 자극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 아래 동맹국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겨 왔다.

1990년대 초에 본격화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전후 냉전기 동안의 일본 자본주의 성장이라는 물밑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경제 ‘기적’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패전국 일본의 미래는 어두워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1955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연 10퍼센트 정도씩 성장해, 이미 1968년에 서방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1990년대 이래 중국이 받고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한 찬사는 원래 일본의 것이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유럽과 미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져 준 덕분에, 일본은 군비 지출을 GDP의 1퍼센트 정도로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산업(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방벽’으로 키우려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핵심 산업 기술을 일본에 공짜로 넘겨주고, 일본의 국내시장 보호 정책을 눈감아 주고, 미국 시장을 개방해 줬다. 미국 경제는 막대한 군비 지출로 한동안 호황을 유지했는데, 이것은 일본(과 독일) 같은 나라들에 수출 시장을 제공했다.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관대함’은 일본 정부가 전략 산업으로 정한 산업들에서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 현상이 분명해질 때까지도 계속됐다.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일부 일본 지배자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1971년 미 국방정보국이 쓴 ‘일본 방위 정책의 진전’이라는 보고서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국력에 필요한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일본 내에서도 민족주의 감정의 증대로 인해 특히 국가 안전 보장을 타국에 의존[하는] … 것에 깊은 불만을 나타내는 집단도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재계가 방위력 증강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지배자들의 관심은 먼저 아시아를 향했다. 1970년대 초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 최대 투자자였기 때문이다. 아시아로 진출한 자본을 보호하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아시아에서 멈추지 않았다. 일본 자본주의는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전체 석유 수입의 80퍼센트 차지)한다. 그래서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석유 수송로의 ‘안정’을 지키는 것도 사활적이었다.

일본 경제는 어느 순간 미국 경제와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대



미일합동군사훈련 1990년대 초기 본격화한 일본 재무장은 ‘평화’헌법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깊어지게 했다.

일 무역 적자는 미국에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1980년대가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졌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해 보려는 시도였다. 이렇듯 냉전 후반기에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더 긴밀해졌지만, 경제적으로는 긴장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해체는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됐지만, 동시에 서방 열강들을 자신의 우산 아래 단결시킬 명분(‘소련 위협’)도 잃어버렸다.

미국의 가장 큰 걱정은 ‘일본(과 독일)’이 경제적으로 강력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프전

그러나 일본(과 독일)은 군사력에서는 결코 미국의 엄청난 군비 지출과 막강한 무기의 수준·규모에 비할 수가 없었다. 1991년 결프전*은 이런 일본(과 독일)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계기였다.

“결프만 위기는 일본과 독일이 군사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양국 모두 그 위기에서 주변적인 구실만을 담당했는데, 이유인즉슨 한편으로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국내의 반대 때문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전과 같은 원거리 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

문이기도 했다(특히 독일).”(알렉스 캘리니코스, 《역사의 복수》)

“[또,] 일본은 결프전에 거금 1백30억 달러를 내놓았는데도 헌법을 근거로 다국적군에 참여하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한테서] ‘너무 적은 일을 너무 늦게 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도쿄는 이런 비판에 충격뿐 아니라 … 심지어 상처까지 받았으며 이후 헌법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자 분투했다.”(개빈 매크맥, 《종속국가 일본》)

이때부터 일본은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폼사’를 부리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헌법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식으로 본격적인 군국주의화 행보를 했다.

1990년대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1992년)과 ‘주변사태법’(1999년) 등을 통과시키면서 재무장과 해외 군사 개입의 길을 조금씩 열었다.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우경화도 뒤따랐다. 과거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며 ‘자학사관’에 기초한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우익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베는 이를 주도한 사람 중 하나다.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일본은 미국의 MD 체제(당시 TMD 체제)에도 가입했다(1998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자극해, 냉전 이후 잠시 빠져들거렸던 미일 동맹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일본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질적으로 ‘도약’했다. 예컨대, 2001년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도우려고 인도양에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이것은 10년 전 결프전에 돈만 댔던 것에 비추면 큰 변화였다. 뒤이어 2004년 일본은 드디어 육해

공을 망라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군대가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일들은 ‘평화’헌법하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헌법 문구와 현실 사이의 모순은 점차 심해졌다. 현재 일본은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예부대로 구성된 육상자위대, 최첨단 함정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곧장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모순

따라서 개헌 등 아베의 시도까지 관철된다면 일본은 아주 순식간에 군사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물론 아베의 시도가 순탄하게 관철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먼저, 아시아 주변국의 ‘반일 감점’ 문제가 있다. 일본의 식민지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의 민중은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다. 물론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진지하게 반대할 리 없다. 지난해에는 한일군사협정도 추진했다. 지배자들은 과거사나 독도 문제도 일본과의 협력 추진에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접근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국민들의 우려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미일 동맹 문제다. 미국의 후원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상당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일본이 미국의 바람 때문에 재무장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잠재된 모순도 봐야 한다.

미국은 일본이 더 강해지고 동아시아에서 더 큰 구실을 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까지 나아가는 것은 꺼려한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핵 위기가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점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베는 여전히 국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 최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베의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이에서 군사대국화 행보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 여전히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

최근 도쿄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2주년을 맞아 4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원전 제로’ 정책을 촉구했다. 이 운동은 일본의 재무장에 맞서는 운동으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다. 일본의 반전 평화운동은 강력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물론 이런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이 운동은 제국주의와 재무장을 반대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정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운동과도 만날 필요가 있다.

좌파는 이런 정치적·조직적 대안을 건설하며 일본 정치의 불안정과 양극화 속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은 군사적 경쟁을 낳고, 이것은 재앙으로 나아가갈 가능성을 낳는다.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도 이런 맥락에 있다. 이 매커니즘은 20세기 초중반에 일본이 야만적 침략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 동시에 일본 민중을 인류 최초 핵 재앙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섬뜩하게도 이 매커니즘이 오늘날 다시 작동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일본 재무장에 반대하고 근본적으로는 제국주의 체제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이현주

‘평화’헌법

일본 헌법. 제9조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평화’헌법이라 부른다.

플라자 합의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재무장관 회담에서 달러 가치는 낮추고 엔화 가치는 높이기로 한 합의. 국제 시장에서 미국 상품은 싸게, 일본 상품은 비싸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결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하자, 미국이 쿠웨이트를 지원하며 다국적군을 이끌고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 이 전쟁은 냉전 해체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정치적·군사적 주도권을 재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학사관

이른바 ‘자기 학대적’ 역사관. 일본 우익들은 과거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적 관점·태도가 일본인의 자존심을 해친다며 자학사관이라고 여긴다.

대북 제재와 전쟁연습이 긴장을 낳았다

제국주의가 진정한 위협이다

김영익

3월 초부터 남북 간에 협박한 말이 오가고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기성 언론과 정치인들은 북한의 정전 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전투 동원 태세 돌입 발언 등을 주로 부각하고 문제 삼았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협박과 도발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언행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진정한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있다. 그 동안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을 고립·압박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한 근본적 책임은 바로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미국은 일찍이 한반도에 핵무기와 핵잠수함 등을 들여왔고,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도 미국이 먼저 했다.

최근의 긴장 국면도 그 출발점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었다.

이번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우선 덩어리다.

미국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며 독자적 금융 제재도 실시했는데, 가장 많은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한 미국이 북한을 ‘일벌백계’ 한다고 나선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 지배자들만을 겨냥한 “스마트 제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주도한 제재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국 대중을 골뚫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은 그저 경제 제재에만 그치지 않았다. 3월 들어 시작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골라 상륙작전을 하는 북한 점령 훈련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핵무장한 핵잠수함, 스텔스기, 전략핵폭격기 등이 이 훈련에 동원됐다.

일본 아베 정권의 위협도 북한을 크게 압박했다. 최근 아베는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은 헌법상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섬뜩한 말을 했다.

북한의 호전적 언행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가하는 강력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전략적 인내

최근 상황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낳은 결과기도 하다. 북미 간 협상을 요구하던 북한 지배자들은 더욱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오바마는 동아시아에서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면 강력한 대북 압박을 포기할 수 없었다. 북한 ‘악마화’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의 좋은 명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대중국 포위망 구축 속에서 근래 이 지역의 긴장은 꾸준히 고조됐다. 중국이 미국의 포위망 구축에 반발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영유권 분쟁이 급증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렸다.

미국은 재정 적자로 군사비를 삭감해야 할 처지이지만, 예정대로 2020년까지 미 해군의 60퍼센트를 태평양 지역

에 배치하려 한다. 미국은 F-35 같은 차세대 전투기와 버지니아급 잠수함, 신형 공중급유기 등 최신 무기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긴장 고조에 일조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두고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그 점을 보여 준다.

오바마는 북한 위협을 빌미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머스 도널런은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확대하는 데서 빠른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물론 지금 당장 한반도에서 심각한 전쟁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거쳐 지금의 긴장이 다시 봉합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북한과 미국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맞바꾸는 합의에 이르러도, 세부 방식이나 이행 과정을 놓고 대화가 중단되고 다시 갈등이 증대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북미 대화의 패턴이었다.

그런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 등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국가 간 약속과 합의는 금세 공수표가 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북한을 굴복시키려고 한·미·일 지배자들이 여러 호전적 조치들을 밀어붙이면서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나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졌다.

예컨대 이명박과 오바마의 강경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2009년 11월 서해 교전, 2010년 11월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 등이 잇달아 일어난 바 있다.

그리고 우발적 충돌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그동안 국지적 충돌이 자주 일어난 서해 NLL 일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심할 수가 없다. 박근혜는 이 지역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따라서 제국주의 간 경쟁과 압박 속에 한반도와 그 주변은 앞으로 불안정이 훨씬 커질 듯하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과 한미동맹 강화가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대북 제재와 압박에 반대하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는 군비 증강 같은 정책에도 반대해야 한다.

지금의 갈등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제국주의 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투쟁해야 한다.

아베노믹스
무제한 돈 풀기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 이웃나라의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근린공립화(이웃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정책’으로 불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은 한반도에 평화는커녕 불안정만 키울 뿐이다 키 리졸브 연습.

한반도 긴장에 부채질하는 박근혜

북한 핵실험 이후 박근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한반도 긴장을 높일 온갖 호전적 조치를 내놓았다.

박근혜가 고른 외교·안보 인사들만 봐도 김장수, 남재준, 김병관 등 모두 군부 출신의 대북 강경파다.

2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박근혜 정권은 국방비를 “국가 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이명박의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억제 전략”은 매우 위험천만한 개념이다. 이 전략 개념은 서해상 교전에 대비해 “선 조치, 후 보고”와 “도발 원점과 함께 지원부대에 대한 타격”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며 서해상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박근혜는 이런 호전적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가 “NLL 남쪽 해상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휘세력을 응징”하겠다고 말도 나온다. 그만큼 서해 등지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박근혜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 계획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해 줄 뿐이었다.

오히려 베트남 전쟁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전 인민적 저항과 국제적 연대가 제국주의의 압박에 맞서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북한 지배자들은 군비 경쟁에 뛰어들어 독자적으로 핵무장 하는 길을 선택했다.

북한 지배자들이 이런 선택을 한 까닭은 북한 체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아래로부터 혁명이 아니라 소련군 탱크의 지원으로 건설된 국가였다.

1948년 정부를 수립한 북한 관료들은 서방·남한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에

체계(KAMD)를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군비 증강과 미사일 전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불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킬 체인’과 KAMD는 향후 미국과의 MD 체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이밖에도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하겠다고도 밝히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려 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강경 대북 정책이 낳을 위험성을 폭로하며 저지해야 한다. 북지 등 대중의 필요를 희생시키는 군비 증강에도 반대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한미 지배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는 것은 분명 역겹지만, 북한 지배자들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을 반대한다. 더구나 핵무기는 파괴력 측면에서 여타의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다. 핵무기는 대도시를 공격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을 받은 제3세계 민족주의 정권들이 모두 핵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었다. ‘불량국가’의 핵무장 시도는 미국이 그 나라를 압박하고 개입할 명분만 더

대처해야 했다. 이를 위해 관료들은 국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축적과 경쟁을 우선한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에 대해서도 북한 관료들은 인민의 필요를 억누른 채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

즉, 북한은 계급 분단이 존재하고, 축적을 위해 다수 인민을 희생시키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착취·억압 체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처럼 반공 우파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이유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종북’ 마녀사냥에 절대 동조 말아야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지배자들과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지배자들과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입장을 가진 자주파 동지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자주파 동지들은 지금껏 국가 탄압을 견뎌 가며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고 피억압 계급과 함께했다. 지금 ‘종북’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오랫동안 노동·학생운동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와 우파들은 지금의 상황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통합진보당 등을 겨냥한 ‘종북’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등 우파들은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북침 전쟁훈련’이라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한 비판조차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며 비난을 퍼붓는다. 심지어 ‘통합진보당 로고가 인공기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하자는 얘기도 다시 나온다.

무엇보다 우파들의 ‘종북’ 공세는 그저 통합진보당과 자주파만이 아니라, 넓게는 운동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우파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일체의 평화 운동을 싸잡아서 ‘종북’이라고 매도한

다. 북한 핵실험 직후 기회를 틈타 박근혜 정권은 쌍용차 농성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일부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주사파는 진보가 아니므로 진보에서 배제하고 도려내자’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르스럽다. 이런 생각으로는 운동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는 우파의 ‘종북’ 공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우리는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운동을 분열·탄압하려는 지배자들에 단결해서 맞서야 한다.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임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6일 인사 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현재 제도 문제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이 “올 상반기 중에 ‘제2공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제2공사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KTX 민영화가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혀 이른바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새누리당 조현룡도 ‘제2공사화’를 제안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아마도 민주통합당 등을 염두에 둔 말인 듯하다. 민주당인 국토해양위 위원장 주승용도 “제2 철도공사 설립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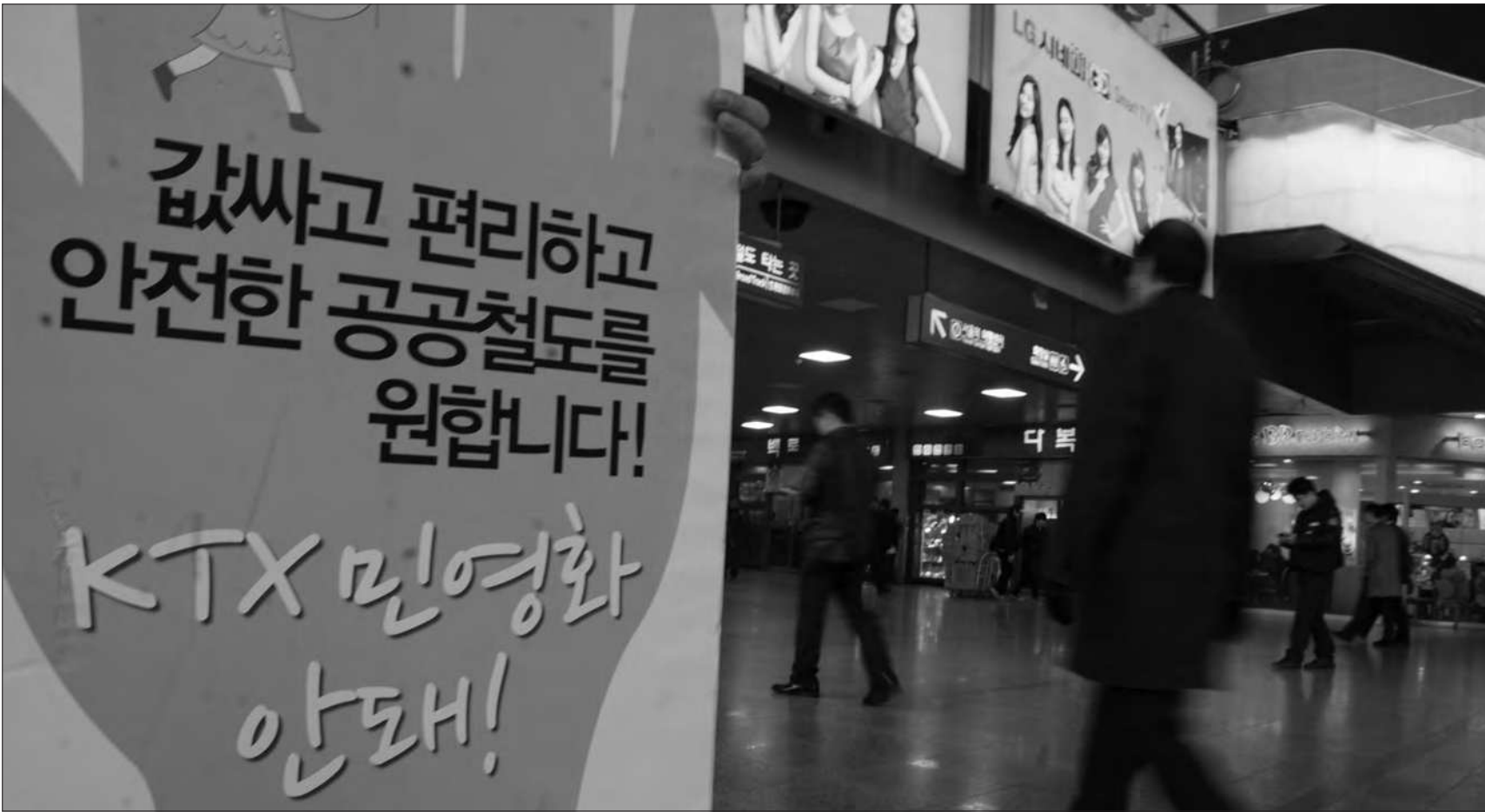
그러나 ‘제2공사화’는 그것이 가져올 효과에서 민영화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철도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시장화를 가속하는 조치기 때문이다. 즉,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고, 요금 인상이나 벽지노선 폐지를 꾀하는 등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경험은 이런 폐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서울시와 김영삼 정부는 서울지하철 공사(현 서울메트로)의 “만성 부채” 등을 내세워 1994년에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설립했다. 이로써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게 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

우선 새로 설립한 도시철도공사에서부터 1인 승무제가 도입됐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2인 승무제는 ‘효율성’ 논리에 밀렸다. 2002년 사상자 3백50여 명을 낸 대구지하철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1인 승무제였다는 점을 보면,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장시간 지하터널을 혼자 운전하는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다.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었고, 급기야 노동



철도 ‘제2공사’ 설립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은 노동조건 악화, 요금 인상, 벽지노선 폐지 등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민영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자 여섯 명이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었다 못해 투신 자살하기까지 했다.

공사 설립 이후 인력 총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은 서울메트로보다 길지만, 인력 규모는 3분의 2 수준이다.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이 메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도시철도공사의 시장화 조치는 다시 서울메트로에 압력을 가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공황장애

철도에서 추진된 공사화도 이런 시장화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02년 공공3사 파업에 부딪혀 민영화가 중단되자,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철도청을 없애고 철도공사를 설립했다.

일단, 정부는 신속히 법을 제정해 “경쟁 여건 조성”과 “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운영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 운영은 수익성 논리, 경영 실적에 좌우됐다. 요금 인상과 장애인·노인·학생·유아 등의 할인혜택 축소가 뒤따랐다. KTX가 개통되자, 정부는 슬그머니 일반열차의 요금까지 인상하고 평일 열차 요금 할인제도도 없애 버렸다.

KTX는 개통되자마자 하루 2건 꼴로 고장 나 ‘고장철’로 불렸고,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랐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후퇴에 시달렸다.

이처럼 당장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시장화 조치는 안전과 공공성과 일자리 모두를 공격하는 구실을 했다. 게다가 이는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구실도 할 수 있다.

만약 서울메트로에서 도시철도공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9호선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도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철도의 ‘제2공사화’도 철도를 잘게 쪼개 팔겠다는 국토부의 분리 매각 방침에 이용될 수 있다.

철도노조 박홍수 정책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제2공사’는 신설 노선들에서 민영화를 도입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신설될 노선들에 대한 민영화도 진작부터 고려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무리하게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관제권 회수도 ‘공정 경쟁’을 이유로 손쉽게 성사할 수 있다.”

게다가 ‘제2공사’ 설립은 수서발 KTX매각의 전(前) 단계일 수도 있다. 인천공항이 건설될 때, 인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에서 분리돼 설립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까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박근혜는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주택시장, 택시지원법, KTX 경쟁 도입”을 꼽으며, 이를 “당장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이 KTX의 즉각 민영화가 될지, ‘제2공사화’가 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공식 폐기한 적이 없고, ‘제2공사화’는 아직 일부에서 거론되는 수준일 뿐이다. 박근혜가 예고한 단체장 ‘코드 인사’도 남아 있다. 민영화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민영화나 ‘제2공사화’ 중 어느 것이든, 시장 경쟁의 원리를 강화해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민영화 반대 운동의 진지를 구축해 나가며, ‘제2공사화’ 등 시장화가 미칠 폐해에 대해서도 비판을 강화하며 대비해야 한다.

박설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철도 ‘제2공사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서울지하철의 경험을 들었다. 인터뷰한 서울지하철노조 활동가 박희석 씨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분리될 때 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현재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 운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때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 경쟁을 위해, 이른바 ‘선진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서울지하철을 분리하게 된 거죠.

당시 서울시가 외형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2조 4천억 원 정도의 건설 부채였어요.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 새로운 노선은 분리해 경쟁시켜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야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지하철의 건설 부채를 국고로 보조하잖아요. 한국 정부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서울지하철의 분리 운영 목적은 경쟁적으로 구조조정과 아웃소싱을 하고, 중국



엔 민영화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서울지하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오곤 했거든요.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요. 서울지하철노조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계속 파업을 했거든요. 수도권권의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했으니 정부도 부담이었을 거예요. 이런 강력한 노조가 있으면,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겠죠.

도시철도가 세워졌을 때 서울지하철의 경력 직원들을 뽑아 갔는데, 노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도시철도노조 초대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노무처의 간부였죠. 우리를 탄압하던 관리자가 노조를 만들었다니까요. 정부 말 잘 듣는 노조가 필요했던 거죠.

분리 이후 어떤 폐해가 드러났나요?

‘경쟁’이라는 게 인력 구조조정, 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하향 압력을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실제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도시철도는 서울지하철과 비슷한 거리의 노선을 갖고 있고 역사도 더 많은데, 인력은 7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지하철은 1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도시철도는 서울지하철에 견줘 비정규직도 훨씬 많죠. ‘효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는 거죠.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서 간접 비정규직을 채용한 거죠.

도시철도에선 특히 공황장애가 심해요. 사고가 한 번 나면, 기관사들이 앉아 있다가도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게

된대요. 공포가 몰려오기도 하고. 시민안전에 심각한 요소인 거죠.

1인 승무를 하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하계역에서 벌어진 열차 후진 사건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어요. 승객이 ‘문을 안 열어 줬다’면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비상전화, 관제센터, 승무소 세 군데서 연락이 빚발친 거예요. 기관사는 순간 당황해서 패닉이 온 거죠.

도시철도가 이러면, 서울지하철은 그냥 두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도시철도와 비교를 당합니다. 서울지하철에도 1인 승무제 도입이 얼마안 남았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한 쪽에서 관철하고 나서, 다시 다른 쪽으로. 이미 인력도 2천 명 정도 줄었어요. 1999년 서울지하철 파업도 2천70명을 정리하고 하겠다고 해서 일어났거든요. 신규 사원들도 거의 뽑지 않아서 노동자 평균 연령이 48세나 됩니다.

서울지하철의 분리 운영이 9호선 민영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분리 당시에는 9호선의 민자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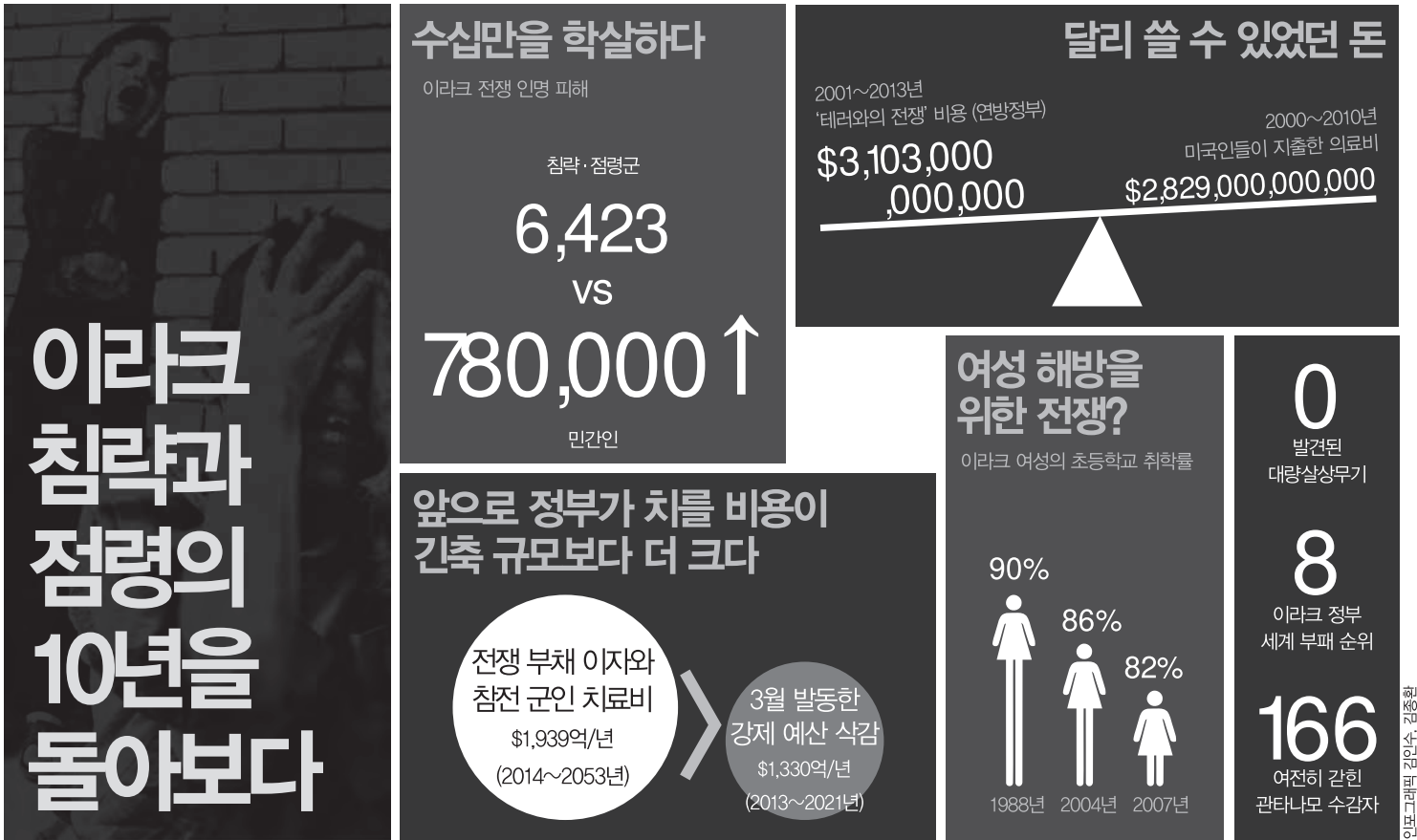
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9호선 민영화는 도시철도가 분리되면서 가능했던 거죠. 도시철도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9호선이라는 파행적인 부분은 생겨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정부는 도시철도에서 시민을 상대로 모험적 운영을 해 본 거예요. 1인 승무도 해 보고, 효율성도 노려 보고, 그런데 ‘해 보니까 별 문제 없잖아’ 했던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었고, 9호선을 민간에 넘긴 거죠. 민영화는 더 많은 효율을 노리니까, 앞으로 무인 시스템으로도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의정부 경전철에서 이미 무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만 여섯 번, 올 1월에만 열 번 이상 쏘여요. 만약 장애인이나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지금 얘기되는 철도 ‘제2공사화’도 이런 문제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이라크 전쟁 10년

진정한 변화를 위해 싸우는 이라크 민중

사이먼 아사프 《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 공저자

[이라크 점령 초기에] 서부 도시 팔루자는 미국의 패배를 상징했다. 이제 팔루자가 다시 한번 반란의 증추로 떠오르고 있다.

라마디와 팔루자가 이번에는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모으는 초점이 됐다.

1월 25일 금요일, 이라크 군은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해 최소 5명을 살해했다. 이들의 장례식에 수만 명이 모였고, 군대를 향한 보복 공격도 있었다.

팔루자 시위는 [총리] 누리 알 말라키가 이끄는 정부에 맞서 점점 성장하는 대중 반란(이라크의 봄)의 일부다. 많은 이들이 평화로운 대중 집회와 거리 점거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거리 점거 시위는 요르단행 서부 중앙 도로를 막아 버렸다.

이라크 정부에 대한 커다란 환멸이 이 운동을 촉발했다. 또 이 운동은 이라크에서 부족과 종파 간 분열을 넘어서 저항이 분출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라크 정부가 사람들의 기본적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해 자라난 분노가 이런 저항을 낳은 핵심 이유다.

미군이 철수한 지 1년, 침략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게 산다.

미국 점령이 끝나자 이라크 내 폭력도 급격하게 줄었다. 2006년에는 3만 5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죽었지만,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1천 5백7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가난과 빈곤은 여전히하다.



미군이 아니라 대중행동이 이라크의 해방을 이룰 수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이라크 시위대.

전력은 부족하고 예고 없는 정전도 빈번하다. 이라크인 수백만 명이 아직도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실업·부패·족벌주의가 횡행한다. 현재 이라크인 약 2백70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말라키는 2010년 선거에서 2위를 했는데도 여전히 중앙 권력과 주요 부처를 모두 손아귀에 쥐고 있다. 말라키는 억압적이고 부패한 계급을 대변하는데, 이들은 미국이 점령을 끝내면서 맺은 치졸한 타협을 통해 부상했다.

말라키 정부는 사담 후세인이 만든 법을 이용해서 노동조합을 금지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옥에 처넣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미국 점령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상 이라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말라키 정부가 통제하는 남부와 중부 지역, 반란에 휩싸인 서부 수니파 무슬림 빈곤 지역, 그리고 미국 지원하의 쿠르드 정당들이 통제하는 북부 준자치 지역.

이런 지리적, 종파적, 민족적 분열에는 이라크의 석유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숨겨져 있다. 석유로 인한 갈등은 쿠르드 지역과 중앙 정부 간에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낳을 뿐 아니라 수니파와 시아파 간 종파 충돌도 불붙이고 있다.

석유

오늘날 이라크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다. 석유 수출은 지난 30년 중 최고치에 다다랐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석유 수익으로 7백70억 달러의 순익을 올렸다(2003년에는 45억 달러였다). 이라크는 한창 석유 투자 붐을 맞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이 오일달러를 굶어모아 치안력을 급증시키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현재 보안군 규모는 67만 명을 넘겼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기 구매 계획(예컨대 F-16 전투기 36대를 미국에서 구입)이 추진되고 있다.

엑슨모빌과 미국·서방·터키의 다른 석유 자본은 이라크 중앙정부가 반대하는데도, 북부 쿠르드족의 준자치 지역과 접촉하고 있다.

남부에서는 중국 석유 기업들이 서방 석유 기업들을 서서히 밀쳐 내고 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이라크 석유 공급량의 70퍼센트를 확보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2010년 중국은 약 80억 달러로 추산되는 [후세인] 바트당 시절 채무의 80퍼센트를 탕감해 줬다. 이 덕분에 중국천연가스석유총공

알고 보기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

기가 있다며 침공 개시

2003년 5월 1일, 부시 승전 선포, 이라크 점령 시작

2004년 미군과 영국군, 점령 반대 운동의 거점인

팔루자를 공격해 2천 명을 학살

2006년 누리 알 말라키가 초대 총리로 이라크 정부 수립

2007년 미군 대규모 추가 파병

2011년 12월 미군 철수 완료

사가 거대한 루마일리 유전을 포함해 수익성 좋은 남부 석유 매장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었다. 중국 기업들은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서도 서방 기업들을 따돌리고 계약을 따냈다.

터키가 자국 내 쿠르드족에 강화를 제한한 것도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유전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섭을 통해 터키는 이라크 도시 키르쿠크에서, 소요가 끊이지 않았던 터키 남동부 쿠르드 지역을 관통해, 터키의 지중해 항구 제이한까지 이르는 송유관을 얻었다.

터키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에 구애하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불화를 빚고 있는데, 이는 이웃나라 정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터키의 기존 외교정책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종파와 부족을 초월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큰데도, 언론은 팔루자 저항이 수니파 무슬림이 시아파 무슬림 정부에 맞서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이런 식의 규정은 부족과 종파를 초월한 뿌리깊은 불만을 숨기는 구실을 한다.

시아파 빈민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사드르는 공개적으로 팔루자의 시위를 지지했다. 2011년에는 쿠르드 지역 정부에 대한 커다란 불만으로 쿠르드족 자체의 “아랍의 봄” 운동이 촉발됐다. 아랍인 지역에서도 중동을 휩쓴 반란에 호응하는 작지만 중요한 시위들이 일어났다.

가난, 부패, 족벌주의, 탄압에 대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부족과 종파를 뛰어넘어 모든 지역에 가득하다. 이 반란은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깊은 분노를 보여 준다.

2003년, 미국 점령에 반대한 팔루자 시위는 전국적인 저항에 불을 붙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위들 역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3년 2월호 / 번역 최병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로의 귀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와 미국의 패권 전략을 다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력이 이라크로 말려 들어간 지 곧 10년이다. 미국은 전술적으로는 곧 적군을 압도했지만, 이제껏 당해 본 적 없는 큰 지정학적 패배로 나아갔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1971~72년 리처드 닉슨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으로 패배의 효과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무기 삼아 미국의 패권에 전례없이 큰 도전장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바락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중심축”을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하며 미군의 60퍼센트를 태평양으로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동을 버릴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비록 [미국에 매장량이 많은] 셰일가스 덕분에 미국은 더 많은 에너지원을 국내에서 마련하겠지만(지난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됐다), 중동은 매우 중요해서 미국이 이곳에서 손을 뗄 수는 없다.

그러나 10년 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눈은 확실히 중동에 쏠려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동아시아를 보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상황은 복잡하다.

1941~45년 태평양전쟁 이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의 산업을 뒤흔치는 식으로 아시아 역내 경제적 관계가 바뀌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 성장의 성과 일부를 군사력 증강에 투입했다. 3월 초 중국은 국방 예산을 10.7퍼센트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중국 국방비 증가는 사실 둔화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0~09년 연평균 증가율 16.5퍼센트, 그리고 1990~99년 연평균 증가율 15.7퍼센트와 대조적이라고 ... 미국의 중국 군사 전문가 두 명이 말했다.

“불가인상을 감안하면 중국의 군사력 확장 속도는 이전만큼 인상적이지 않다. ... 실질 가격으로 볼 때 2010년과 2011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평균 3.1퍼센트 상승했다. ... 해마다 ‘정부 보조금에서 군대가 받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다.’”

국방비

높은 국방비 지출은 강력한 경쟁국들이 몰려 있는 지역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 인도, 남한, 베트남도 그렇고, 북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전문으로 한다.

그 위험성은 한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드러난다. 일본과 중국은 타이완 근처에 있는 그 열도를 각각 센카쿠와 다오위다오라고 부른다. 일본은 1895년부터 그곳을 지배했고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한다.

지난해에 이 갈등이 고조됐는데,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이 섬들을 도쿄도에 편입시키려 한 저돌적 행동이 계기가 됐다. 예를 들어, 우파인 전(前)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그 섬들 중 세 곳을 매입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와 군함이 섬 근처에서 추격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본은 1월 30일 중국 군함이 일본 구축함에 사격관제 레이더를 조준(사격 직전 단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분쟁은 살 썰리지만 흥미롭기도 하다. 첫째, 이 분쟁은 전통적인 영토 분쟁이다. 이는 세계화 때문에 영토 분쟁이 사라졌다는 지배계급 사상가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둘째, 바로 세계화의 중심국들, 즉 일본과 중국뿐 아니라 미국(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관계)도 이 분쟁의 당사자다. 이처럼 세계의 3대 경제가 이 조그만 섬을 둘러싸고 잠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두 적대자 가운데 일본이 더 공세적이었다. 보수적 민족주의자인 신임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지난해 말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아베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필요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려고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미국의 처지에서 볼 때, 이런 경쟁 관계는 자국에 유리하다. 물론 오바마 정부는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경쟁국들(무엇보다 일본과 인도)을 포섭해 중국을 가둘 수 있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44호 / 번역 차승일

국내·국외 진보 인사와 투사들의 축하 메시지



“200호 발간도 축하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장의 광기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라는 대안이 오늘날보다 시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신문은 그 대안을 만들 필수적 고리입니다. 200호 발간도 축하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디스 오어(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위크> 편집자)



“우리의 공동된 투쟁에서 동지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스에서 혁명의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한국 동지들이 처한 조건에서 100호 발간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여러분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혁명과 국제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의 공동된 투쟁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노스 카르가니스(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노동자 연대> 편집자)



“인류의 운명을 위한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신문”

대기업 후원과 광고 없이 사회주의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레닌이 1백여 년 전에 설명했듯이 사회주의 신문은 운동 조직자로서 신문 판매자와 구독자 사이, 여러 투쟁들 사이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한편 사회주의 신문은 언제나 이 핵심 질문에 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존 몰리뉴 (아일랜드 사회주의 사상 정치 <아일랜드의 사회주의> 편집자)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위해 앞으로도 건투하길”

계급적 모순이 심화하는데도, 연대가 무엇보다도 요청되는데도, 우리에게 이 개념들이 계속 멀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류 언론, 주류 교육이 이와 같은 의식을 우리의 머리에서 깨끗이 없애 버리는 것을 그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레프트21>이 계급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꼭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투하기를 바랍니다.

박노자(노래익이 오슬로 대학교 교수,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저자)



“1%에 맞선 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의 입장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기초해 1퍼센트의 자본과 지배계급에 맞선 99퍼센트 노동자 대중과 파업일자, 소수자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 해 온 우리 나라 진보좌파의 대표 정론지 <레프트21>의 1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성진(경성대학교 교수,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인)

“노동자의 신문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길”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며 <레프트21>의 더 큰 성취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비정규직회 투쟁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동지들에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동해방 그날을 위해 불발파견 철폐, 정규직 전환 투쟁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천의봉·최병승

(1백50일 넘게 고공 농성 중인 현대차 울산비정규직회 조합원들)



“미래로 향한 길이 나게 될 것입니다”

<레프트21>이 있음으로 해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덩달만 무성해진 왼쪽 땅을 오가다 보면 미래로 향한 길, 없는 길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사>(전4권) 저자)



“박근혜 정부와의 투쟁에 계속 함께합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동지들의 노고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노골화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투쟁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그 길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투쟁!

김정우(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레프트21> 100호를 축하합니다”

우리가 들녘에서, 그 공장에서 말들이 살아 해방! 은누리가 대들! 빛나라 한몸 한결 <레프트21> 100호 발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김정훈(전교조 위원장)



“민감한 사안에서도 진보적 주장을 굽히지 않은 소중한 존재”

<레프트21>은 진보의 독자적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은 진보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사안들, 반전평화, 핵발전 문제는 물론, 낙태나 성소수자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도 굽히지 않고 진보적 주장을 굽히지 않은 <레프트21>의 존재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감한 목소리로,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희망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대안 부대표)

100

99%의 진실과 승리를 위한

레프트21의 전진은 박근혜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2009년 3월 13일 <레프트21>이 험한 첫발을 내딛은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레프트21>의 뿌리는 2003년 2월 15일부터 발행된 반전·반자본주의 신문 <다함께>에서 시작됩니다. <다함께>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 반전 운동 물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뒤 <맛밥>, <저항의 맛밥>이 이름이 바뀌면서도 꾸준히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레프트21>이라는 제호로 새출발했습니다. 길게 보면 10년의 역사입니다. <레프트21>은 2008년 촛불 항쟁과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 태어났습니다. 거대한 촛불 항쟁과 심각한 자본주의 위기를 겪으며 대안을 찾는 사람들의 갈망이 되려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레프트21>은 우파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억주행에 맞서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무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에게 <레프트21>은 ‘정신적 초코파이’입니다.”

2010년 말에 접거 파업을 벌이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입니다. 하루에 김밥 한 줄, 초코파이 하나로 버티던 노동자에게 <레프트21>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지지자들에게 불법 딱지를 붙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박근혜 시대에 더욱 악랄해질 수 있습니다. <레프트21>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독자들의 정기구독과 후원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기성 언론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레프트21>은 세상의 진실을 알리며 노동자들에게 투지와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아만과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에 맞선 99퍼센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더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99퍼센트의 진실과 저항의 승리를 위한 <레프트21>의 전진은 박근혜 시대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세요

100호 발간 기념 기간(2013년 4월 18일까지)에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소책자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현재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소책자를 드립니다.

(《백마이들을 위한 맑스 가이드》, 《백마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 《백마이들을 위한 트로츠키 가이드》, 《백마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 중 택1)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한 번 후원”, “정기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후원을 신청하시고 100호 발간 축하·지지 메시지도 남겨 주세요.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세요

100호 발간 기념 기간(2013년 4월 18일까지)에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소책자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현재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소책자를 드립니다.

(《백마이들을 위한 맑스 가이드》, 《백마이들을 위한 레닌 가이드》, 《백마이들을 위한 트로츠키 가이드》, 《백마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초 개념들》 중 택1)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한 번 후원”, “정기 후원” 모두 가능합니다.

※ 정기구독·후원을 신청하시고 100호 발간 축하·지지 메시지도 남겨 주세요.



<알이시타라키>를 읽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

이집트 혁명 속의 혁명적 신문

“우리의 신문은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회주의자들은 2년 전에 시작한 혁명을 방어하고 전진시키고자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다. <레프트21> 100호를 맞아 신문이 투쟁 건설에서 하는 구실에 대해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회원들의 말을 전한다.

2년 전, 이집트의 대중 시위와 파업은 사악한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그 뒤로 RS의 신문 <알이시타라키>(사회주의자라는 뜻)를 판매하는 사람은 집회와 파업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알이시타라키>는 신규 독자들이 신문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어느날 한 남자가 다가와 ‘당신을 계속 찾았어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신문을 환불하러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남자가 신문을 7부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아주 평범한 노동자로 보였어요. 그 사람이 지불한 신문 한 부 가격은 땀 네 방울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신문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고, 주변 동료들에게 주려고 신문을 7부나 더 사 간 것이지요.”

무함마드는 이집트에서 혁명이 떠오르기 전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언제나 구속될 위험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한 듯하다가도 갑자기 구속이 줄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활간지인 <알이시타라키>의 독자들은 신념이 확고한 활동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RS 회원 아시라프 오마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신문을 보통 1천 부가량 발행했지만 실제 판매는 몇 백 부에 그쳤어요. 행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을 판매할 기회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2011년 1월 수백만 명이 무바라크에 맞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 신문의 구실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무함마드는 이렇게 전했다. “거리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법을 두고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신문이라기엔 너무 투박하고 아주 마추어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러나 곧 신문이 팔리고 읽히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문은 강렬한 표제와 짧은 기사들로 구성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문이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구호를 앞세운다며 구독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야말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군부에 반대했다’고 말하더군요.”

무함마드는 당시 RS 활동가들이 신문을 판매하려고 타흐리르 광장에 모였을 때 느낀 두려움과 흥분된 감정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건 일종의 도전이었어요. 그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었죠. 우리는 타흐리르 광장에 가판을 세우고 소리가 지 시작했어요. ‘맛다! 우리는 국가를 타도하길 원한다!’ 수많은 군중이 우리가 수사받는다든 사실에도 아랑곳 않고 우리 신문을 사려고 몰려들었어요.”

<알이시타라키> 판매 부수는 이집트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에 견주면 아주 작은 것이 사실이다. 이 신문의 정기 발행 부수는 1천~3천 부다. 그러나 실제 독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RS를 팔로우하는 수만 명 중 아주 일부일 뿐이다. RS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7만 5천 명이다.

이집트의 혁명적 좌파 앞에 놓인 엄청난 과제를 생각하면 <알이시타라키>의 성과가 별것 아닌 듯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신문이 새로운 세대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이시타라키>가 혁명적 활동가들 사이에서 얻은 존중은 지난

▶ 11면으로 이어짐

높아지는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

정부가 쌍용차 공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와 마힌드라 자본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여전히 들은 척도 않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시작된 철갑 농성은 1백 일을 훌쩍 넘겼다. 이 상황에서 죽음의 행렬을 끝내고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난해 22번째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쌍용차 해고자들의 대한문 농성과 분노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불안과 생활고에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술한 역경 속에서도 투쟁을 이어 온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메아리다.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이런 대중 정서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힌드라 측이 무급휴직자 복귀와 8백억 원 유상증자(주식 발행을 늘려 일정액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 계획이라도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의 압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힌드라는 이 정도로 사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박근혜도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었고, 새누리당 이한구도 “사기업의 노사 분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의 고용을 ‘누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 모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일자리 제공 못하는 마힌드라

마힌드라는 압력에 떠밀려 무급휴직자들을 복귀시켰다. 그러나 2009년 점거파업이 끝날 당시 약속한 1년을 한참 넘긴 3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게다가 무급휴직자들은 아직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다. 공장 안 노동자들도 일감 부족과 낮은 임금, 살인적 노동강도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초 한 노동자가 자살하기까지 했다.

특히, 마힌드라는 ‘4백55명(무급휴직자) 이상의 재고용은 불가능하다’며 해고자들의 복직에 선을 긋고 있다. 사장 고엔카는 “해고된 인력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면 회사의 흑자 전환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농후해지는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이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인수 당시 “우리는 상하이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뒤집으며 상하이차의 전철을 밟고 있다.

고엔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년간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소나기 파하라는 빈말에 불과했다. 그는 올해 2월에 말을 바꿔 “앞으로 직접 투자는 없다”고 뿔을 박았다.

이는 상하이차의 행보와 꼭 닮았다. 상하이차는 네 차례에 걸쳐 직접 투자를 약속하고 특별 협약까지 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쌍용차의 2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조차 2008년 말에 “상하이차가 하루빨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도 계속됐다.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시에 공증까지 받아가며 약속한 ‘고용 승계 및 보장’ 합의의 효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2007년엔 정규직 4백70여 명, 비정규직 5백여 명을 해고했고, 2008년 말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 급기야 이듬해 노동자 3천여 명을 공장에서 쫓아냈다.



“더는 죽이지 말라” 동료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대한문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는 쌍용차 해고자들. 죽음의 행렬을 끝낼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쌍용차의 거듭된 위기

연도	특징
1998	대우그룹에 매각
1999	워크아웃 돌입
2004	상하이차에 매각
2009	법정관리 돌입
2011	마힌드라에 매각

문제는 지금 상하이차의 먹튀 과정에서 드러난 투자 약속 불이행, 임금·노동조건 하락, 기술유출 시도 등이 마힌드라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힌드라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죽음의 행렬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다.

명백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쌍용차의 비극을 만든 명백한 책임 당사자다.

우선, 2004년에 워크아웃 상태였던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이는 비극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정부는 2002년에 공적자금 등의 명목으로 쌍용차에 1조 2천억 원을 쏟아붓고는, 투입한 돈의 절반도 안 되는 혈값에, 그것도 먹튀 기업에 쌍용차를 매각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는 아랑곳 않고 상하이차의 기술 유출을 눈감았고, 상하이차가 부도를 내고 떠날 때도 마지막까지 지분을 팔아 자금을 회수해갈 수 있도록 방조했다.

둘째, 정부는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다. 당시 이명박은 “오죽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겠냐” 하며 상하이차를 옹호했고, 급기야 법정관리하에서 대량해고를 감행했다.

2009년 6월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고용 유지”를 자금 지원 기준으로 삼는 공적자금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런 정당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2011년 정부는 또다시 먹튀 우려가 있는 마힌드라에 쌍용차를 매각했다. 이 매각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제2의 먹튀’로 또다시 커다란 소용돌이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정책이 잘못됐음을, 그것이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불안과 죽음에 몰아넣었음을 인정하고 고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여기서 민주통합당도 예외가 아니다.)

쌍용차의 사례는 체제의 불안정성에 내건 저진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1998년 대우그룹에 매각, 1999년 워크아웃 돌입, 2004년 다시 상하이차에 매각, 2009년 법정관리 돌입, 2011년 또다시 마힌드라에 매각. 쌍용차가 이런 위기를 반복하는 십수 년 동안, 노동자들은 강제 휴직되고, 해고되고, 임금이 깎이고,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결국 일부는 죽음을 택했다.

이제 이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그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쌍용차를 공기업화해 해고자들을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기업화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가 부도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져라’ 하는 요구는 매우 중요한 투쟁의 고리다.

물론, 현재 마힌드라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마힌드라가 해고된 노동자들을 재고

용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하며, 따라서 먹튀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3천 명에 이르는 해고자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공기업화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가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소유가 더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다. 흔히 국가를 노동과 자본을 중재하는 중립적 기구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 국가는 자본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자본 축적과 노동자 착취의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쌍용차 같은 기업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 사실, 정부가 아니라면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대고 고용을 보장할 주체는 없다.

게다가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할 가장 적절한 대상이고, 공기업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가 (사기업보다) 쉽지 않다.

공기업화 요구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제기한다. 마힌드라 비호냐, 노동자 일자리와 생존이냐를 정부에 묻는 것이다.

이는 이 사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의 이윤이나, 노동자의 삶이나. 이런 제기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낼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공기업화 요구는 지금 분열해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요구이기도 하다.

사측과 정부는 2009년부터 줄곧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켜 왔다. 지금도 공장 안과 밖, 복귀한 무급휴직자와 기존의 ‘산 자’ 등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지부가 최근 무급휴직자들의 복귀를 환영하고, 노동자들의 화합을 강조한 것은 정말 적절했다. 이런 접근은 해고자들과 공장 안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서도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모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측은 지금 ‘해고자 복직이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당장 일감 부족과 낮은 임금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은 이런 이간질에 취약할 수 있다.

‘경영 정상화’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먹튀’의 불안에도 대처할 수 있는 공기업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꾀하며 운동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다.

요컨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안은 정부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기업화를 해, 해고자를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마힌드라가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먹튀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물론, 마땅히 마힌드라에도 응당한 책임을 물어 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코자 하는 정리해고의 부당성, 정부의 책임 등도 이 요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쌍용차 문제는 결코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문제다.

쌍용차 투쟁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시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 대안이 중요한 이유다.

우석균 칼럼

박근혜 정부, 한국 의료의 앞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걸고 당선됐다. 그런데 모든 복지 공약이 후퇴했다. 새 정부 정책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아예 빠졌다. ‘민생’이 사라진 것이다. ‘민생’ 대통령에서 ‘민생’을 빼면 뭐가 남을까? 그냥 ‘대통령’만 남는다. 이 대통령께서 추구할 정책은 무엇일까.

병원과 전봇대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날 신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보란 듯이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내렸다. 정부 출범 초기에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멀정하게 돌아가는 3백 병상의 병원을 하루아침에 폐쇄한다니. 동네 의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생각해 보라. 수술이 끝난 환자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우리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진료의 지속성까지 생각해 달라는 것은 이쯤 되면 사치스럽게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병원을 폐쇄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그것도 환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때는 전봇대를 뽑더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병원’을 뽑아버리겠다는 것인가.

그 폐쇄도 ‘적자’ 때문이란다.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쇄한다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을 대부분 폐쇄해야 한다. 국립대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서울대병원부터 폐쇄해야 한다. 13개 국립대병원 중 지난해 흑자를 낸 병원은 3개뿐이었다. 7퍼센트밖에 안 되는 공립병원. 이것마저 폐쇄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작이다.

‘4대 질환 1백 퍼센트 보장’은 원래 공약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처음부터 진보정당과 민주당에 견줘 협소하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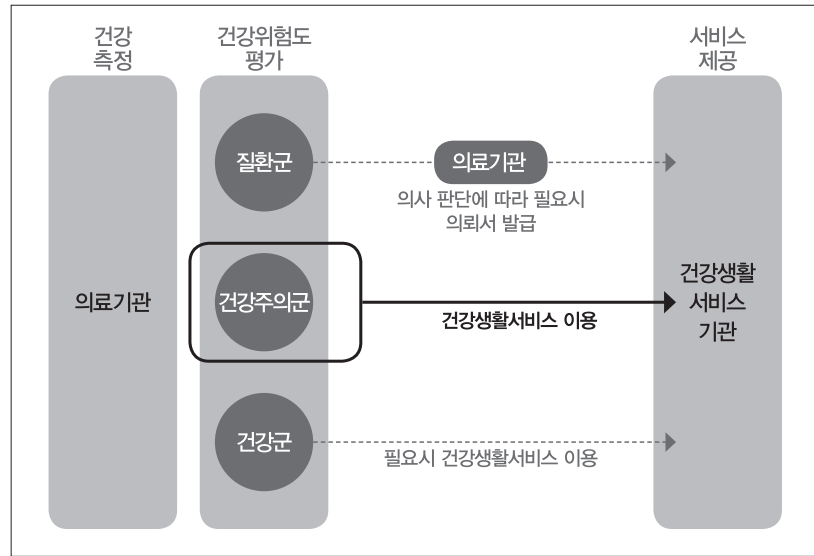
를 데 없었다. 예를 들어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 공약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비 1백만 원 상한제’였다. 이에 견줘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4대질환 1백 퍼센트 보장이었다. 암, 중풍, 심장병, 희귀난치성질환에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진료비가 5백만 원 이상 나오는 환자 중 4개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는 약 1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매우 협소한 보장성 강화 공약이다.

그래도 이 구호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공약은 2005년 1조 5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생겼을 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내걸었던 ‘암부터 무상의료’를 베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꾀죄죄한 공약조차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즉, 이른바 ‘3대 본인부담 의료비’가 다 빠진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원래 그런 공약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왜 3대 본인부담 항목이 다 빠졌냐고 묻는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고 12월 18일에 보도자료도 냈다고 했다. 12월 18일? 전국 방방 곡곡에 “4대 중증질환 100% 국가가 책임입니다” 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서는 선거 하루 전에 보도자료를 내서 안 해 준다고 했단다. 복지부 장관은 아예 한술 더 떠 대놓고 “4대질환 1백 퍼센트 보장은 선거 캠페인용”이라고까지 말했다. 게다가 혹시나 해서 새누리당 웹사이트에 나온 보도자료를 다 뒤져 보아도 진영 장관이 말한 보도자료는 아예 없다. 공약 자체도 사기였지만 그 해명도 사기라는 이야기다.

의료민영화

그것뿐 아니다. 지난 1월 31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 국제병원을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 국제병원으로 짓겠다고 박근혜 당시 당선인에게 건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 있는 ‘건강생활관리서비스’ 개념도.

의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국제병원에 대한 좋은 솔루션을 찾으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인천 영리병원은 새 정권에서는 안 세워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께서 당선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역시 아니었다. 진영 장관이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영리병원을 “녹색기후자금 등 국제기구 유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 송도지역에 시범적으로 설립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1백40대 국정과제에 나오는 말과 같다. 영리병원을 기어이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지다.

1백40대 국정과제를 보면 곳곳에 의료 민영화 공약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48번 항목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항목에는 “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 확산”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에는 “병의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혁신모형”이라는 설

명이 들어 있다. 노인복지 항목에도 ‘스마트케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문구만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다. 그런데 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 설명한 복지부 웹사이트의 설명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쉽다.(그림 참고) 간단히 말하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으니, ‘건강증진’과 ‘질환관리’라는 영역(그림 오른쪽)을 우선 떼어서 건강생활서비스기관이라는 이름의 영리기업에 맡겨 이것부터 영리화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는 이미 SK, KT, LG, 삼성 등 재벌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SK, LG, 삼성, KT 등이 이른바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삼성, SK, LG 재벌이 운영하는 ‘건강생활서비스’라는 기업이 지주회사가 되고, 이 아래에 각 재벌이 거느린 삼성생명, LIG 보험, 삼성, 현대병원, 여기에 스마트케어라는

이름으로 IT 업체까지 거느리는 ‘헬스케어’ 산업을 만들고 이를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한국 재벌들의 보건 의료 미래 구상인 것이다.

진보의 목소리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백 퍼센트 보장, 기초노령연금 두 배,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 반으로 인하, 심지어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민생과 복지 정책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진보정당의 공약을 말로만 베끼지 실내용은 없는 꾀죄죄한 것이었고 이마저 모두 후퇴시켰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의료부분만 보더라도 공공병원 폐쇄 같은 직접적 복지 축소에 더해 지역적 영리병원 허용, 우회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진행하려 한다. 의료·복지 부문만 그런가?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다. 철도,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구조조정 지휘자였던 현오석씨가 지금 경제부총리 지명자다.

이 상황에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목소리는 무엇이어야 할까? 일부의 이야기처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내세운 복지 공약만이라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는 이미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협소한 복지 공약도 지킬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의료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공부문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회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를 도울 때가 아니라 그 실체를 밝히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냉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인다.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 나갈 뚝은 여전히 진보와 사회운동에 있다.

▶ 9면에서 이어짐

“101호는 1천 부, 102호는 2천 부 팔렸습니다”

〈알이시타라키〉의 발전은 이집트 혁명과 함께 부침을 겪었다.

2012년 봄이 되자 혁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고, 집회도 찾아들기 시작했다. RS 회원 아시라프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주로 대규모 집회에서만 신문을 판매했어요. 집회가 점차 찾아들면서 대학, 직장, 지역에서 신문 판매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죠.”

RS는 활동 반경을 수에즈와 포트사이드 등 새로운 지역과 도시로 확장하며 신문 판매로 온라인 매체에 친숙하지만 사람들과 직접 만나 토론하고 싶어하는 젊은 혁명가들을 만났다.

무함마드는 이런 직접 대면의 장점을 설명했다. “직접 대면을 하면 독자와 직접적이고 실감나는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신문 판매는 사람들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고, 또 그 만남을 실제 활동으로 이끕니다.”

2012년 여름 내내 RS는 단체 역사상 가장 야심찬 전국 캠페인을 조직했다. RS 활동가들은 “우리는 살고 싶다”는 기치를 들고 식량·물·전기 부족, 보건 서비스 붕괴, 실업 등에 맞서 투쟁하는 지역민들과 연대했다.



“전투 한가운데서 신문을 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했습니다.”

이 캠페인 덕분에 〈알이시타라키〉는 새로운 지역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2012년 10월이 되자 〈알이시타라키〉 판매는 더는 대규모 집회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 아시라프는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101호를 1천 부 판매했고, 그 다음 호는 2천

부를 판매했습니다.”

신문 내용도 진화해야 했다. 아시라프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파업 투쟁이 엄청난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투쟁을 단지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는 노동자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석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아시라프는 신문의 다양한 요소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첫째는 이론이고, 둘째는 분석이고, 셋째는 역사적 경험이고, 넷째는 신문을 선동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동적 글쓰기란 단지 ‘파업하라!’, ‘점령하라!’는 구호를 앞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사에는 구체적 상황과 전투에 필요한 구체적 전술이 담겨야 합니다.”

무함마드는 〈알이시타라키〉가 거둔 중요한 성과를 말해 줬다.

“우리는 전투 한가운데서 신문을 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했습니다. 신문 기고자가 반드시 직업 언론인일 필요가 없다는 점도 보여 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신문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줬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신문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RS 회원 비산 카삼은 지난 12월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대통령 무르시의 헌법 개정 반대 집회를 공격한 일이 있은 뒤 거리에서 〈알이시타라키〉를 판매한 경험을 들려줬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이시타라키〉를 판매했어요. 사실 아무도 신문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투표로 뽑힌 무슬림형제단 정부가 집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 질문들이 제기됐죠. 채소 시장에서 지하철역까지 도시 곳곳이 정치 토론으로 들쭉였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치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출판물, 특히 〈알이시타라키〉 같은 신문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알이시타라키〉가 분석을 제공해 주는 덕분에 사람들은 늘 이 신문을 읽고 싶어합니다.”

출처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335호 / 번역 조명훈

‘21세기 사회주의’와 차베스가 못다 이룬 꿈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랜 암투병 끝에 3월 6일 숨졌다. 전 세계의 민중에게 깊은 영감을 준 차베스의 “21세기의 사회주의”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조망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 제 확신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그것은 사회주의, 즉 평등과 정의가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005년 1월 브라질 포르투알레гре 세계사회포럼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온 5만 명에게 이렇게 연설했다. 청중은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차베스는 그런 환호를 받을 만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배자들의 복마전이었던 석유 산업이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야심 찬 사회 복지 프로그램 ‘미션’의 결과로, 시행 첫해에만 1백만 명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었다. 기초 의료 보장 프로그램 덕에 1천8백만 명이 의료 혜택을 누렸다. 빈곤층에게 식료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국영 소매점이 1만 4천 개 이상 설립됐다.

이런 개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백인·원주민 혼혈인 차베스는 ‘볼리바르식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민중과 거리를 좁혀 갔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를 단호히 비판했고, 신자유주의가 낳는 고통을 혐오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베네수엘라가 수십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투쟁의 정점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세계경제 불황은 라틴아메리카에 재앙이었다. 수출 시장 위축과 금리 인상으로 외채 위기가 터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했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은 최악의 처지로 내몰렸다. 20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7천 5백만 명, 즉 라틴아메리카 인구 전체의 15퍼센트가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반면 지배자들은 돈을 갈퀴로 긁어모았다. 계급 불평등이 극심해졌고, 반란과 항쟁이 잇달았다.

민영화 계획 철회, 주요 산업 국유화, IMF 협상 백지화 등의 요구를 내건 민중 항쟁의 물결이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민중은 항쟁을 일으켜 정권을 두 번씩 갈아치웠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거리 시위, 공장 점거, 민중의회 수립 등을 선보인 강력한 민중 운동이 등장했다. 브라질이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에서도 민중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를 선택했다.

항쟁

베네수엘라에서 급진화는 1989년 2월 27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작됐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유가는 말 그대로 하룻밤 새 갑절로 뛰었다.

등푼길에 나선 학생들은 이 사실에 분노해 반란을 일으켰다. ‘카라카소’라고 불리는 이 반란은 들불처럼 번졌다. 페레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 1천5백 명을 학살했다.

3년 뒤인 1992년, 공수부대 대령 우고 차베스는 다른 급진파 장교들과 쿠데타를 일으켰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차베스는 투옥됐다.

그러나 그는 TV에 잠깐 출연해 “우리의 목표가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았”



사진 출처: Bernardo Lora (플리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평등과 정의가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중 권력”을 아래로부터 건설하는 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5년 5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광장에서 연설하는 차베스.

지만 “분명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연설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7년 후, 차베스는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다국적기업과 결탁해 석유 수출에서 짭짤한 이득을 보는 베네수엘라 지배자들은 이를 두고 볼 생각이 없었다.

2002년 4월 12일, 우익 군 장교들이 차베스를 감금했고, 기업 총수가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서 차베스의 개혁 조치들을 백지화하려 했다. 쿠데타였다.

베네수엘라 민중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학살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최대 50만 명의 빈민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우익 쿠데타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쿠데타에 실패한 기업자들은 그해 말부터 직장 폐쇄로 베네수엘라 경제를 말려 죽이려 했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이 나섰다. 노동자들은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운행하려고 노동자위원회를 건설했고, 폐쇄된 공장 문 앞에서 시위를 벌여 공장을 재가동하도록 만들었다. ‘기업주가 공장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이 공장을 접수해 통제할 것이다’ 하는 구호가 큰 인기를 끌었다. 세 달 만에 직장 폐쇄도 끝났다.

아래로부터

이 과정에서 차베스는 급진화했다. 대중의 힘으로 권좌에 복귀한 차베스는 “민중 권력”이라는 기치 아래 국유화와 복지 확충을 가속화했다. 그가 새로 만든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에 6백만 명이 가입했다.

그는 미국 제국주의도 분명하게 반대했다. 2006년 UN 총회에서 차베스는 조지 부시를 직접 겨냥해 “악마”, “[지옥불의] 유황 냄새가 난다”며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에 연대를 표하기도 했다.

차베스는 선언했다.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은

곧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다.

‘볼리바르식 혁명’의 재원인 석유 수익은 중동의 불안정과 맞물린 고유가에 기대고 있었다. 2008년 말 경제 위기가 세계를 강타하자, ‘미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받았다.

기업주와 관료 들도 골칫거리였다. 기업주들은 거액을 횡령해 기업 국유화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차베스 정부의 관료들도 부패와 비효율로 악명 높았다. 빛나는 대중 운동을 건설한 기층 활동가들은 여러 차례 쓰디쓴 좌절을 맛봐야 했다.

차베스는 특유의 ‘친서민적’ 매력을 발휘해 일요일 TV 예능 특집 프로그램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국정을 운영했지만, 이런 행보가 “민중 권력”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차베스가 스탈린 같은 독재자는 아니었음은 분명하지만,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와 권력 문제에서는 모호함이 있었던 듯하다.

PSUV는 차베스와 대중운동 사이의 연결고리가 돼야 했지만, 당내 논쟁은 종종 ‘차베스에 대한 도전’이라 간주돼 차단당했다. 관료들의 부패나 기업주들의 공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국가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조직됐다.

미국 제국주의를 반대한 그는, 어떻게 봐도 “민중 권력”과 무관한 중국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과 손을 잡는 방향을 모색했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시리아의 아사드를 지지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차베스를 지지하는 국내의 일부 좌파와 논자들은 아쉽게도 차베스의 모호함, 한계, 오류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 자체가 지배자들에게 이용되는 것인 양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차베스 자신은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대통령에도 네 차례나 당선했고, 차베스가 제안한 국민투표는 대개 승리했다. 그러나 기층 민심은 차비스타[차베스 지지자] 정부

볼리바르식 혁명

차베스가 이끈 좌파적 정치 운동. 19세기 초 스페인에 맞서 독립전쟁을 이끈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지었다.

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PSUV는 지방선거에서 중요 지역을 우익에게 내주기도 했고, 차베스 자신조차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54퍼센트를 얻어 권좌에 오른 이래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차베스가 떠난 지금, ‘볼리바르식 혁명’은 커다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차비스타 국가기구가 민중의 잠재력을 압도할 것인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서 좌파적 도전은 시련을 겪는 듯 보인다.

좌파 대통령의 대명사였던 브라질의 룰라는 당선 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미군의 아이티 점령을 지지하며 파병까지 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물 민영화 반대 투쟁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한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접수해 개혁을 이루려는 시도는 흔들리고 길을 잃기 십상이다.

진정한 ‘21세기 사회주의’를 이루려면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바로 눈부신 대중운동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 준 기층 민중이 진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도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기층 운동은 10년 전만큼 역동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아랍 혁명이 전 세계에 거대한 영감을 주며 전진하는 지금, 투쟁이 부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21세기 사회주의’가 성공하려면 ‘볼리바르식 혁명’에서 드러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민중 권력”을 아래로부터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조직적 노력은, 베네수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과제다.

김민수



《망각을 거부하라》,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서평



현대 중국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중국 노동자들.

현대 중국 민중 투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김용욱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온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다룬 피상적 전기들이 나오고 이전 지도자들의 전기는 현책방이나 할인 책방으로 간다. 반면에 중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인 중국 노동자·민중 투쟁에 관해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읽을 책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첸리첸(전리군)의 《망각을 거부하라》(이하 《망각》)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이하 《모택동》)가 출간된 것은 매우 반갑다.

이 책들은 중국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탁월한 과학적 분석을 제공한 않지만, 그런 분석을 가능케 할 사실들을 지금껏 국내에 출간된 중국 관련 책들 중 가장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일반적 상식과 달리 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적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중국은 노동자와 농민을 쥐어짜는 폐쇄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였다. 이 체제에서 주된 착취자는 민간 자본가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고위 관료였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 양대 열강과 군사적으로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공산당 관료들은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고 혹독한 착취를 강요했다. 당연히 관료들은 이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기 배를 채웠다.

관료 계급

예컨대, 《망각》에 인용된 한 사례를 보자. 1956년 7월 신화사 기자 다이황은 고향 근처 마을을 방문했다. '신중국' 기치 아래 발전한 마을 모습을 기대했던 그는 충격을 받았다.

“고향 마을 친지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은 더 떨려 왔다. ...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몸을 가릴 의복조차 없었으며 불치의 병이 아니면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해방 후 짧은 몇 년 사이에, 이곳의 일부 공산당원 간부들이 '신 악덕 지주'가 돼 버린 것이었다. ... 1954년 [그당 간부]는 세 칸의 큰 집을 지었는데, 모든 기와와 벽돌은 다른 집에서 가져왔고 사람들을 무노임으로 부려 먹었다. 일하던 농민이 점심을 먹고 일하라고 요구했다가 사람들 앞에서 두드려 맞아 정신을 잃었다. ...

사방에서는 '이 개자식들이 어디 공산당이란 말이나? 그야말로 국민당이 부활한 것이지!!!'라는 원망의 소리가 일었다.”

다이황은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착취 관료 계급의 존재를 제기했다. “이 편지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관료 통치와 특권 계급의 유무'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 올 여름 여러 도시와 농촌을 다니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이 확연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즉 [중국에는] 특권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 전역에서 다이황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당시 베이징대학 학생이던 린시링은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현재의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 진정한 사회주의는 아주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민주적이지 않다. ...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들의 약점은 다른 관료들은 몰라도 마오쩌둥만은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다. 그들은 강제수용소에 수용됐고 마오쩌둥의 해괴한 '과학적 사고' — 계급이 핏줄에 따라 유전된다는 생각 — 에 따라 연좌제가 적용돼 그들의 가족도 우파로 낙인찍혔다. 강제수용소에서 그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다.

한 '우파'는 너무 배가 고파 물레 생보리를 많이 먹고 뜨거운 물을 마셨다가 보리가 발효돼 고통 속에 발버둥치다 죽었다. 그러자 한 당 관료가 이 '우파 가족들'을 모아 놓고 시체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다.

“우파 분자인 쉬00이 생보리를 먹고 배가 부풀어 죽었다. ...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개조를 따르지 않고 당에 완강히 대항하더니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간 것이다.”

“엄마, 무엇 때문에 엄마를 '대우파', '나쁜 녀'이라고 부르고 나를 '소우파'라고 부르지?” 하고 불만을 토로하던 린시링의 어린 아들은 국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

이런 '반우파' 탄압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정부 발표로도 55만 명에 이르지만, 첸리첸은 전문가를 인용해 최대 2백만 명이 우파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렇게 가혹하게 탄압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당시 경찰 보고서를 보면 지배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공산당 정책에 항의하는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그중에는 무려 20만 명이상이 참가한 것도 있었다.

공산당 지배자들은 체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일부 개인들의 분석이 이런 분산된 운동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운동을 결합시키는 구실을 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었다. 예컨대, 린시링의 연설이 끝난 후 일부 학생들이 “만약 지금 중국에 헝가리와 같은 사건[1956년 헝가리 혁명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거리로 나가 시위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은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화혁명

《망각》이 1957년을 전후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마오주의 체제의 문제를 다뤘다면 《모택동》은 마오주의 시대부터 개혁·개방 때까지 현대 공산당 통치 체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한다.

이 책에는 지난 60년간 중국 체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 인용, 숨겨진 사건들이 매우 풍부하게 기록돼 있다.

예컨대, 1960년 중공업 산업 육성을 위해 계란의 80퍼센트를 국가가 강제로 징발해 수출하고 남은 20퍼센트를 공산당 고위 관료들이 독점했다. 이를 두고 당시 국가 재정부장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인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달걀을 먹지 못하고, 노동자 농민 연맹인데 노동자 농민이 모두 달걀을 먹지 못한다”고 논평한 부분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이 책에서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문화혁명' (이하 문혁) 부분이다. '문혁에 아래로부터 혁명 성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 보기 바란다.

저자는 마오쩌둥이 의도한 것과 문혁이 낳은 지배자들의 분열을 이용해 노동자·민중이 자기 요구를 제시한 것을 구분해, 문혁에 대한 온갖 혼란한 주장들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 예컨대, 마오쩌둥은 '반란은 정당하다'고 말했지만, 막상 중국 노동자들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쟁취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자 이들에게 '반혁명 경제주의'라는 죄명을 씌우고 진압했다.

정반대로, 한국 우파들의 머릿속에서 문혁과 홍위병은 '책임 있는' 엘리트들이 민중의 '과도한 요구'를 억누르지 않았을 때, '무책임한' 민중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견해에 반대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문혁 중의 학살과 사망을 홍위병과 조반파의 '폭민' 행위로 전가하는데, 이는 국가 체제의 죄과에 대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은폐와 면책입니다” 하고 주장한다.

'봉건 사회주의'

저자는 문혁 당시 마오쩌둥과 중국 체제 자체에 대해 총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 '반정부 사상'들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정부 사상'들은 마오쩌둥 시대 성격에 대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많은 이들은 문제의 근원이 세계적 자본주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중국 사회의 '봉건적 유산'에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문제가 '봉건 사회주의'였다면 기존 공산당 틀 내에서 '봉건'을 지우기 위한 개혁 투쟁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반면에, 진이진 등은 국가가 자본가 구실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진이진

은 중국 노동자가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력 없이 자기 노동력만 파는 상품이자 “무조건적 복종물”이 됐고 공산당 관료들이 “권력 귀족 자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도 중국이 아직 자본주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존 틀 내에서의 '민주혁명', 즉 정치혁명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이들이 공산당과 국가에 독립적인 정치 조직을 결성하는 데 실패한 것은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1949년 혁명의 역사적 유산과 맹렬한 탄압 외에도 이런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첸리첸의 책들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첸리첸 자신이 이 체제의 근본 동력을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반정부 사상'들의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

첸리첸은 때로는 “[중국의 60년간의] 발전 성과는 노동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기본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현상인데, 왜 자칭 '사회주의'라는 국가에서 반복해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마오쩌둥 개인의 소신 이 체제 전체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둘째, 첸리첸의 책에서 이른바 '포스트 모택동 시대'를 다룬 부분은 그 이전 부분보다 훨씬 덜 흥미롭다. 특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1989년 톈안문 항쟁을 다룬 부분이다. 이 운동은 첸리첸이 상세히 다룬 그 어떤 운동보다도 더 강력하게 중국 통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초대형 대중 운동이었는데도, 이 책에서는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셋째, 서술 방식과 분량이다. 이 책들은 중국 역사를 친절하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역사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읽는 것이 좋다. 또, 《망각》이 7백 쪽, 《모택동》이 모두 1천 쪽이다 보니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지나치게 비싼 책값도 부담스럽다.

현대 중국 자본주의를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찰리 호어가 쓴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을 추천한다. 국가 자본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현대 중국의 역사를 매우 명료하게 분석한 이 책은 첸리첸의 책을 뛰어넘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같은 시기 중국 민중 투쟁의 역사를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첸리첸의 책들은 매우 훌륭하고 심지어 감동적인 자료 구실을 할 것이다.

《망각을 거부하라》
첸리첸 지음, 길정해 등 옮김, 그린비, 800쪽, 3만 7천 원《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2009》 상·하
전리군(첸리첸) 지음, 연광석 옮김, 한울, 각 권 621쪽·524쪽, 4만 6천 원·3만 8천 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3월 27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김민호 기자

현대차 사측에는 면죄부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소환장을 남발하는 박근혜 정부 2013년 1월 현대차 2차 희망버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불법파견 ‘증거 인멸’용 전환 배치 중단하라

하수영 노동자연대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무시하며 신규 채용을 강행한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 2공장 도장부에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강제로 전환 배치하려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인 라인에서 일하던 조합원 세 명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단기(1~2개월짜리) 직고용 계약직을 투입했다. 직고용 계약직은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 시비를 회피하려고 2년 미만으로 직접 고용한 계약직 노동자를 뜻한다. 현대차 사측은 전환 배치로 불법파

견 공정의 흔적을 지우고, 결국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신규채용 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한다. 그래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바라며 곳곳이 버터 온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3월 7일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두 시간 부분파업(작업장 이탈)을 벌이고 2공장 도장부 앞에 모여 시위를 했다. 최근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합원 3백여 명이 2공장 도장부 앞에 모여 사측의 전환 배치에 항의하고 도장부 진입을 시도했다. 사측은 관리자와 용역 2천여 명

을 동원해 투쟁을 막았다. 그러나 이날 투쟁은 사측이 신규채용을 강행해도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여전히 투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반면, 정규직 도장2부 대의원회가 전환 배치에 합의했다는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측의 공격에 날개를 달아 준 셈이기 때문이다.) 2월 19일 불법파견특별교섭이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섭을 현실화하고 뒷받침할 투쟁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교착 상태에 있고, 사측은 전환 배치 카드를 꺼내 공격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활동가 소환장 남발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인가

경찰이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벌어진 대체 인력 저지 투쟁을 빌미로 박현제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47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철탑농성장 철거에 맞선 항의에 참가한 13명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다. 최근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검찰 지휘를 받아 현대차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현대차 사측과 하청업체가 선정한 노동자만 조사해 비정규직지회의 항의를 받았다. 현대차 사측에는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 노동

자들은 탄압하려는 것이다.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당선 이후다. 박근혜는 취임식 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인가. 경찰의 족쇄 채우기에 맞서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전국학비노조 황경순 경남지부장

“이제는 학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가 3월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황경순 경남지부장을 만났다.

현재 조합원들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비정규직의 임금은 멈춰 있고, 정규직은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부당하다. 고용도 제멋대로다. 고용된 지 2년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곳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이 되기 전에 15시간 이하 최단기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단시간 노동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지난해 파업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파업은 처음이라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파업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교직원들은 그동안 조리원들을 감자탕집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파업 이후로 보는 눈이 달라졌다. 같은 교직원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생겼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90퍼센트가 우리 파업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크게 느낀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학교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올해 투쟁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교육감 직고용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단체 교섭과 고용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지금은 학교장이 맘에 드는 사람만 골라 재계약을 시키는데, 교육감이 직고용하면 교육청에서 인력 풀제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된다. 호봉제, 교육공무원직 도입도 중요하다. 교육공무원직이 되면 가장 좋다. 그러면 법적으로 호봉제, 교육감 직고용이 보장 된다. 자연스럽게 정기적으로 단체교섭도 할 수 있다. 이를 따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5천 간부를 만들어 내고, 올해 6월에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 6월 총력 투쟁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 중이다.

인터뷰·정리 성지현

고려대

학교 당국은 강사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최근 고려대 당국이 전국강사노조 고대분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영곤 교수는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 등 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곤 교수가 올해 1학기부터 해고된다. 지난해 말 학교는 박사가 아닌 사람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말라고 경영학부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박사가 아닌 김영곤 교수는 강사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교수의 추천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올해도 경영학부가 아닌 곳에서는 박사 학위가 없는 강사들도 강의를 배정받았다. 사실상 김영곤 교수 표적 탄압인 것이다. 또 올해 1월 14일에 학교 당국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려대분회(이하 전강노 고려대분회)가 농성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농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날마다 1인당 50만 원씩, 전강노 고려대분회의 노조원 3명 분으로 1백50만 원을 내게 하겠다고 한다. 강사 월급이 과목당 약 40만 원인 상황에서 말이다. 교육기관이라기엔 너무도 악랄하기 그지없다. 전강노 고려대분회의 텐트는 강사들의 처지에는 관심도 없는 학교 당국의 현실을 보여 준다.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든 이 텐트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워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심지어 학교는 소장에서 본관 주변에서 농성·시위하거나 현수막을 다는 것까지 문제 삼았다. 심지어 학내에서 천막 자체를 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강사노조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학내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문제기도 하다. 김영곤 교수의 복직과 가처분 소송 철회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자.

소민호 고려대 학생

원광대

등록금 대폭 인하와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총회가 준비되고 있다

3월 12일 열린 원광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3백71명이 참석해 찬성 2백26명 반대 1백6명 기권 39명으로 전체학생총회 소집안이 통과됐다. 많은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 탓에 빚더미에 갇히고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한다. 게다가 원광대는 비싼 등록금에 걸맞지 않게 책걸상은 낡았고 일부 건물은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교육환경도 열악하다. 학교가 학내에 편의점을 들여오면서 학내 물가도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전학대회 구성원들은 사실상 동결인 등록금 0.6퍼센트 인하를 받아들이 수 없었던 것이다. 학교는 적립금으로 4백40억 원을 쌓아 놓고 있다. 지난해에 쓰지 않고 이월한 돈만 1백70억 원이다. 이 돈이면 등록금을 1인당 1백만 원씩 인하할 수 있다.

기만

게다가 201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뒤 원광대 재단은 해마다 50억 원을 학교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27억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또 재단은 자체로 쌓아 놓은 돈이 1백20억 원이나 되는데도 사학연금 납부를 학교에 부담시켰다. 그 액수는 25억 원가량이라고 한다. 이런 기만적인 학교·재단에 맞서 더 큰 운동을 벌여야 한다. 한편 나는 애초에 총학생회가 낸 전학대회 초안을 보고 4가지 수정안을 발의하려 했는데, 다행히도 전학대회 전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내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첫째, 나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는’ 요구를 ‘기만적인 0.6퍼센트 인하 반대, 등록금 대폭 인하’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초안은 단계적 방식을 암시해 부적절해 보였기 때문이다. 또, 학교 당국에 “재정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을 수익성 논리에 따라 운영하는 방향과 연결될 수도 있다. 기만적인 0.6퍼센트 인하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었다. 둘째, ‘우수교원 적극 채용(산학협력 전문 인력)’ 요구를 ‘전임교원 확충 및 비정규 교수 처우 개선’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대학 교육을 기업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킬 수 있는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것보다 전임 교원을 확충하고 비정규 교수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교육을 질을 개선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초안은 학생총회에서 학생 요구안을 확정한다고만 돼 있었는데, 나는 총회에서 행동 계획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학생총회를 한번 연다고 학교 측이 등록금 대폭 인하 같은 요구를 들어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총회는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총회가 성사되면 그 힘으로 대중적 본관 점거 같은 투쟁을 벌여야 하고, 설사 성사되지 않더라도 모인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 요구도 넣자고 했고, 이것도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셋째 항목에 관한 내 의견은 “학생요구안 실현을 위해 우리 학우들은 구체적 행동에 나선다”로 반영됐다. 그래서 나는 전학대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예를 들어 본관 항의 방문, 대중적 본관 점거 등을 논의한다”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학교를 압박하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구체적 행동 방식을 예로 든 것이다. 내 취지에 공감한 중앙운영위원 다섯명과 함께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 결과 찬성 2백92명, 반대 47명, 기권 22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대다수 대의원이 우리의 요구를 이루어낸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다. 총학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0퍼센트가 등록금을 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을 만큼 고액 등록금에 대한 학내 불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총회를 성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모여야 하고, 총회는 더 강력한 행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박영준 원광대 학생

Report@left21.com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3월 27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신념
지배자들의 총알받이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여호와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등을 이단이라 생각했다. 지금도 내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나를 전도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정도다. 그런데 전쟁 문제에서는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도, ‘여호와와 증인’의 태도가 일부 개신교도의 태도보다 옳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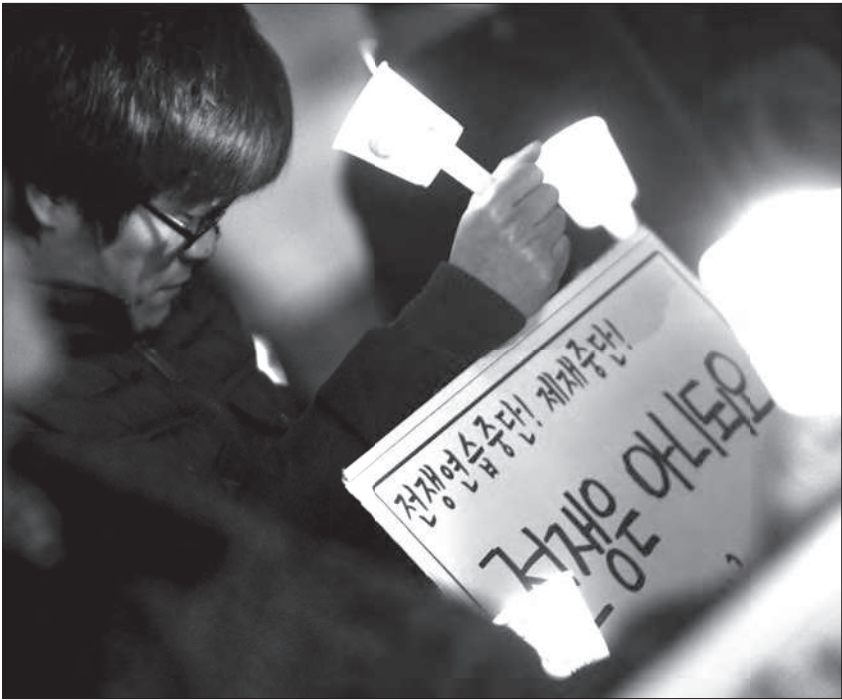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이방인들’이라 해 전쟁으로 죽이고 그 땅을 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구원이었다. 그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을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치부하며 도륙한 것은 신이 보기에 도 ‘악한’ 짓이었을 것이다.

‘여호와와 증인’ 신도들이 박정희 정권 때에도 병역을 거부한 것은 평화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선한 싸움’으로 포장하는 것은 이에 견주면 참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북한의 지배계급은 악하지만, 전쟁이 나면 북한의 가난하고 혈벗은 인민들부터 총알받이가 된다. 남한의 지배계급 역시 악한 것은 마찬가지다.

전쟁이 나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장터로 끌려간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나라이기 전에, 가족과 친구일 것이다. 삼성의 이 건희나 현대의 정몽구를 지키러 가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이다(그런데 사실은 그렇다). 그들의 희생정신은 대단하지만, 사실 역사와 현실을 보면 그런 정신은 만들어지고 강요되는 것 같다.

박근혜는 안보가 위태롭다 하고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는 자는 선제타격을 주장한다. 그런데 박근혜가 지명한 장관들은 병역기피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안보를 제일 먼저 내세우는 새누리당 의원



3월 13일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

들 중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는 많지 않다. 그들과 그 자식들은 ‘신의 아들’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가난한 노동계급의 자식들이다.

건국의 아버지?

역사적으로도 그랬다.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지만, 그는 한국전쟁이 났을 때, 국민에게 안심하라며 거짓말하고는, 자기는 피난 가면서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다. 박정희는 혈서를 써 내밀며 일본에 충성을 다짐했고, 독립군을 쏘 죽이는 것으로 공을 세웠다.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들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쟁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전쟁 억지력은 우리 편이 군사적으로 우월할 때 있는 것이다. 서로 엇비슷한 상태로 힘 불리기에만 집중한다면, ‘평화를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긴장만 높아질 뿐이다. 지켜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노동계급의 자식들은 2년 동안 인권을 짓밟히며 강제로 ‘봉사’하다가 전쟁이 나면 끌려가 총알받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병역조차 하지 않는 지배계급은 뒤에서 군수산업으로 배를 불리고 해외로 도피할 것이다. 또, 파괴된 자본 위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딜레마인 이윤율을 회복하고 다시금 성장할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종착지는 전쟁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조된 긴장 상황은 단편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에서 동아시아의 위기가 어떻게 격화돼 왔는지를, 중미 갈등 속에서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남한 지배계급도 장단 맞추며 북풍몰이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김샘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는 시립대 당국 규탄한다. 3월 13일 기자회견

서울시립대

“반쪽짜리 직접 고용”을 넘어서는 투쟁에 나선 청소·시설 노동자들

3월 13일 서울시립대 본관 앞에서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시립대분회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은, 언론에는 ‘직고용 1호 대학’이라고 알려진 서울시립대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자리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시립대분회 조합원, 서경지부 활동가, 다른 대학 분회장, 그리고 시립대학교 학생들까지 40여 명이 참석했다.

3월 4일부터 시립대 청소 노동자들은 직고용으로 전환됐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염원이 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개혁일 뿐 아니라, 고령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 얻은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립대분회 윤세현 분회장은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두고 “반쪽짜리 직접 고용”이라고 규탄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인원 축소가 가능하고, 정년은 오호러 줄어들어 고령 노동자들이 당장 실직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직접 고용”

무엇보다 용역업체는 빠졌지만 학교 당국이 여전히 제3자인 척하며 노동자들의 요구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기본협약서와 총장 위임장을 교섭장에 가져오기로 약속해 놓고도 두 달째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직 직고용되지 않은 시설 노동자들은 겨우 8명이 건물 33곳을 관

리한다. 또한 본래 업무인 시설 관리와 별 관계 없는 목공과 필터 청소 같은 업무도 봐야 했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마구 부리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용역업체 현장 소장이 이런 노동자들에게 해고 협박과 임금 삭감 위협을 계속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장 소장을 교체하고 새로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그럼에도 학교 당국과 용역업체 JS씨밀레는 적반하장으로 행동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교섭 자리에 나왔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조합원들이 교섭에 참가한 시간을 결근 처리하거나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을 내리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법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 기자회견을 방해하려고 예정에도 없던 대청소를 지시하기도 했다.

학교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본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문 앞에 막아 세웠다. ‘무노동’ 우파 박근혜 정부조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상황에서, 이런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 천대는 구시대적 발상일 뿐이다.

시립대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전히 승리한다면 이를 본보기로 다른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도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오동환 서울시립대 학생

맑시즘2013

7월 19일(금) - 22일(월) |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문의 : 02-2271-2395

※ 맑시즘은 13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해외 연사 존 몰리뉴

존 몰리뉴는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이자 아일랜드 사회주의 사상 잡지 《아이리시 맑시스트 리뷰》의 편집자다. 또, 아일랜드 좌파 정당과 세력들의 선거연합체인 ‘통합좌파동맹’에서 활동했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 《마르크스주의와 정당》(책갈피, 근간) 등을 썼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부산지회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 — 진정한 복지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연사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레프트21> 칼럼니스트) 일시 : 3월 26일 (화) 오후 7시 장소 : 토즈 부산대점 11호실 (부산대 앞 부산은행 사거리) 참가비 : 3천 원 문의 : 010-2008-0588	서울 중북부지구 성폭력과 여성 차별 — 반여성폭력 운동의 쟁점들 연사 : 최미진(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3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4호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9820-5698	서울 서부지구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쟁점과 마르크스주의 연사: 광이경(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일시 : 3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하교육장[“공간 여성과 일”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직진, SC제일은행 뒤편)]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7725-9823(문지도 환영)
---	--	--

용산 개발 사업 부도가 보여 준

탐욕과 투기로 가득 찬 체제의 단면

강동훈

총 사업 규모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린 용산 개발 사업이 부도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처에서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사업을 주도한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은 서로 "네가 먼저 돈을 내놓으라"며 다투었지만, 누구도 수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건설사들과 국민연금 등 30여 출자자들은 투자한 자본금 1조 원에다 그동안 쓴 비용 수천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로써 용산뿐 아니라 삼양동, 독섬, 삼성동, 잠실운동장 등에 들어설 예정이던 1백 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제2 롯데월드를 빼고 모두 건설이 중지될 상황이다. 세계 대공황 때 건설돼 '엠펙티(헛빈)스테이트'라고 조롱받은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례에서 보듯, 초고층 빌딩 사업이 시작되면 경제 위기가 온다는 공식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이 좌절될 경우 이에 따른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용산 개발 사업이 완전히 파산하면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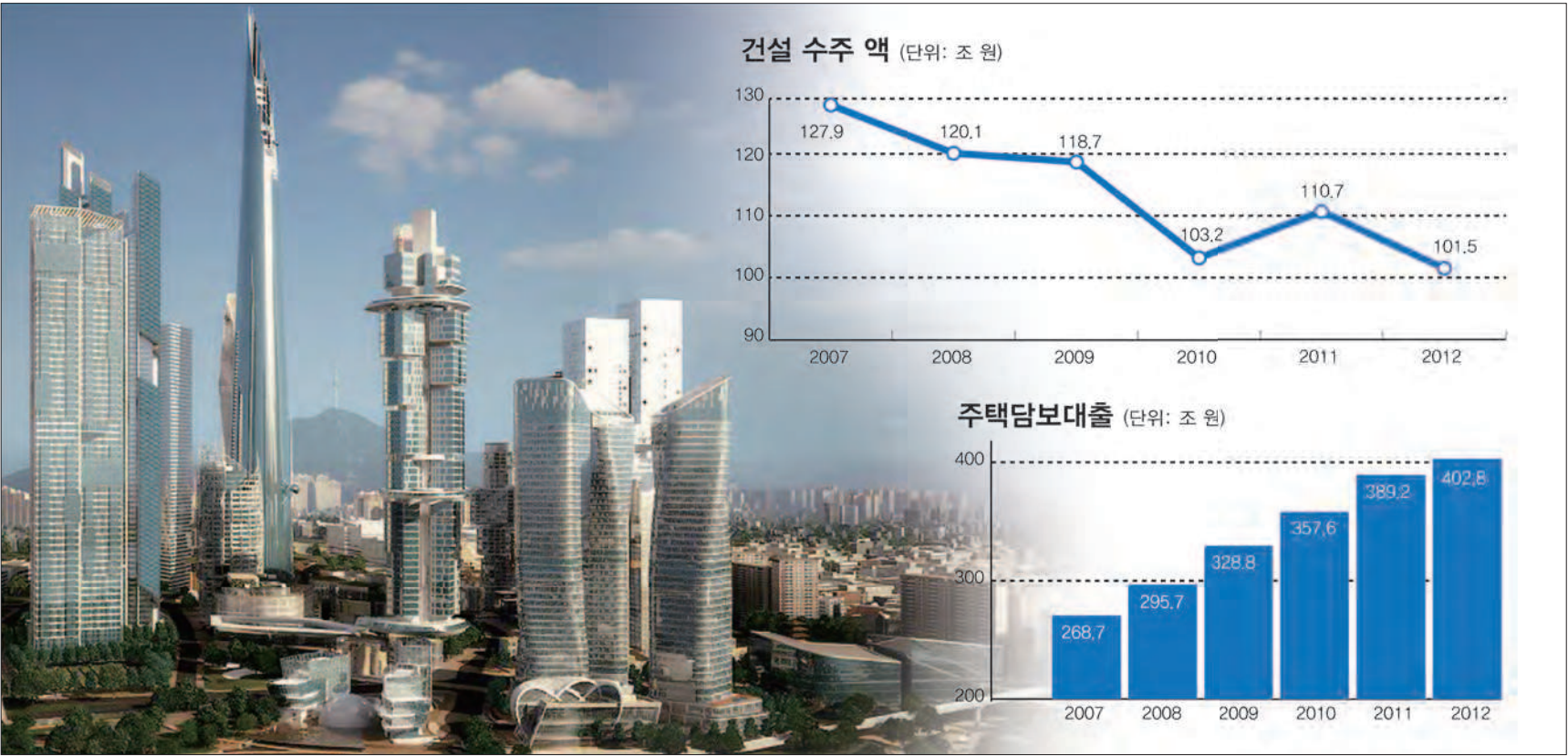
2008년 세계경제 위기 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가라앉았다. 건설 수주액은 2007년에 견줘 무려 26조 4천억 원(20퍼센트)이나 감소했다.

2010~12년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이 22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수익은 곤두박질치고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지난해 상장 건설사 42곳 중 1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상위 건설사 1백곳 가운데 20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이다.

건설사들의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권을 강타하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쌍용건설의 은행 대출금 5천억 원 중 3천억 원가량이 손실로 처리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신용 전망까지 타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의 여파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창구는 사실상 모두 막혀 버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신용도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 그러나 한국에서는 건설사들이 PF에 대한 보증을 서기 때문에 PF 부실은 건설회사 부실로 이전된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DTI가 40퍼센트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예를 들어, 주택의 담보 평가 금액이 1억 원이고 LTV가 60퍼센트일 경우, 6천만 원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재벌 계열 건설사조차 자금을 끌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한편, 약 4백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증가도 금융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용산에서도 서부이촌동의 2천3백여 가구가 평균 3억 원이 넘는 빚을 졌다. 그러나 용산 개발 지역의 집값이 크게 떨어져, 집을 빼앗기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집값이 떨어지면서 '강통 주택'이 늘어나, 집을 경매 처분해도 못 받아 내는 주택담보대출금이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내 상환이 어려운 다중채무자들의 주택담보대출도 25조 6천억 원이나 됐다.

총체적인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3월 말쯤까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시장주의자인 국토부 장관 서승환의 성향으로 보건대, DTI·LTV*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부양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로 부동산 시장 부양에 성공할지도 의문인데다가, 설사 성공하더라도 경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는 효과 이상을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부유층만 득을 볼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주거 복지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자본을 끌어와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면, '주거 복지'는 입발림이고 건설회사

와 부유층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부양은 지배자들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면 붕괴의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견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의, 또 새누리당 내의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갈등 격화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함께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줄 것이다.

부도났으니 노동자 해고?

야비한 책임전가의 극치를 반대한다

용산 개발 사업의 파산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자본이 상당히 잠식돼 채권 발행 등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2012년 말 코레일의 자본금은 8조 8천억 원에 부채는 11조 원 수준이다. 그런데 자본금 중에는 용산 땅값 5조여 원이 이미 포함돼 있어, 이 땅값을 제외하면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 주겠다고 서, 경비 절감, 인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또, 코레일이 국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해서 문제가 생겼으며, 코레일이 소유한 역사(驛舍) 등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얼마 전까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며 추진했던 역사 환수를 용산 사업 파산을 빌미로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코레일 사측도 "인력 구조조정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만간 '희망퇴직'과 비정규직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망쳐 놓고서 애먼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용산 개발 사업 파산과 코레일의 손실은 완전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커진 게 분명했는데도, 이명박이 임명한 전 코레일 사장 허준영과 전 서울시장 오세훈이 합작해 용산 개발 사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 자들이 예상 수익을 뺏기위하며 사

람들을 끌어모은 과정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용산구 국회의원인 진영조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통합 개발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정도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을 책임은 가린 채 전 정권만 탓하며 노동자와 평범한 대중에게 고통을 떠넘길 의도를 보이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정치인과 경영진의 책임을 철도 노동자들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철도 노동자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화는 더 큰 철도 사고를 낳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용산 파산을 빌미로 한 철도 구조조정은 조금치도 정당성이 없다.

3월 개강 맞이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대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3월 23일(토)
2시 ~ 3시 40분

위 세시대를 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진보운동의 과제

연사 전지윤
(진보연론 <레프트21> 편집자)

2

3월 23일(토)
4시 ~ 5시 40분

유로존 위기, 미국 재정 절벽, 흔들리는 중국 경제—

고장 난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연사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3

3월 24일(일)
2시 ~ 3시 40분

NORTH KOREA
Pyongyang

북한핵 실험 파장과 깊어지는 한반도 위기

연사 김영익
(진보연론 <레프트21> 동아시아 담당 기자)

4

3월 24일(일)
4시 ~ 5시 40분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끝나지 않은 아랍 혁명—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연사 김중환
(진보연론 <레프트21> 국제 담당 기자)

3월 23일(토) ~ 24일(일) 오후 2시 ~ 5시 40분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서관) 202호

주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옛 대학생다함께) <http://stu.alltogether.or.kr>

참가비 8천 원 (하루 5천 원) 티켓 구입 문의 010-5678-8630 (문자도 환영)